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제23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6. 12. 20

民族統一研究院

- 목 차 -

開會辭 丁世鉉 1

< 주제발표 및 토론 >

1. 동북아 안보정세와 주변국의 대한반도 ... 김국신 5
정책 전망
 ◦ 제1주제 토론요지 23

2. 북한의 대내외 동향과 남북관계 최진욱 31
전망, '96~'97
 ◦ 제2주제 토론요지 69

3. 남북한 관계 현황과 전망 손기웅 81
 ◦ 제3주제 토론요지 113

회의일정 123

開 會 辭

多事多難했던 丙子年이 저물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한해 한반도 안팎의 情勢 推移와 南北韓 關係를 돌이켜 分析해보고 내년을 展望하기 위한 學術會議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외부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탈냉전 이후 東北亞의 勢力構造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 4월 정상회담을 통해서 「新安保共同宣言」을 발표하였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4월의 정상회담에서 미·일 신안보동맹에 대응하여 「戰略的 同伴者關係」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4국의 연쇄 頂上會談 결과 형성된 한반도 주변에서의 미·일 新安保體制와 중·러간 戰略的 同伴者關係 대립 양상은 7월 옌친의 재선, 10월 하시모토 총리의 재집권, 11월 클린턴의 재선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南北關係 개선과 平和統一을 추구하는 우리의 利害와 상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食糧難을 포함한 심각한 經濟難으로 인한 社會逸脫 현상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일련의 脫北事態에서 보듯이 북한사회의 不安要因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지도부는 근본적으로 開放·改革을 추진하여 식량난을 비롯한 산적한 課題의 해결을 도모하기 보다는 金日成 遺訓統治

와 思想敎養의 강화를 통하여 現 體制를 維持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입니다.

북한의 韓國排除 및 對美關係 우선전략으로 인해 금년에는 남북한간에 公式對話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잠수함 침투사건 등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한반도에서 긴장을 해소하고 항구적인 平和體制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과 미국이 제안한 4者會談에 대해서도 북한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韓半島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복잡한 현실을 감안하여 연구원에서는 한반도 周邊 및 北韓情勢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南北韓 關係를 개선하고 우리의 國益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周邊4國과의 關係를 再定立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學術會議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學術회의가 한해를 정리하고 내년의 주변정세와 남북한 關係를 전망하는데 有益한 討論의 場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나마 開會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 12. 20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丁世鉉

< 주제발표 및 토론 >

제1주제: 통일환경

- 사회: 여인곤(국제연구실 실장)
- 발표: 김국신(국제연구실 책임연구원)
“동북아 안보정세와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 토론: 김유남(단국대)
김창수(KIDA)
백진현(외교안보연구원)

제2주제: 북한정세

- 사회: 전현준(북한연구실 실장)
- 발표: 최진욱(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북한의 대내외 동향과 남북관계 전망,
'96~'97”
- 토론: 정대규(통일원 회담사무국)
도준호(조선일보)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제3주제: 남북한 관계

- 사회: 김영윤(정책연구실 실장)
- 발표: 손기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남북한 관계 현황과 전망”
- 토론: 양영식(통일원 회담사무국)
정규섭(관동대)

東北亞 安保情勢와 周邊國의
對韓半島政策 展望

김 국 신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東北亞 安保情勢와 周邊國의 對韓半島政策 展望

김국신(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 목 차 >

- I. 序 論
- II. 脫冷戰期(1990~95) 東北亞 秩序의 變化趨勢
- III. 1996年 東北亞 安保情勢의 特徵
- IV.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 推進 現況
- V. 1997年 東北亞 情勢 展望
- VI. 結 論: 東北亞 4國의 對韓半島 政策 展望

I. 序 論

미·소를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가 와해된 이후 동북아 지역의 정세를 보면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감소된 반면 중국과 일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勢力版圖가 변화함에 따라 역내 국가들의 관계도 협력과 갈등을 겪으며 재조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유동적인 동북아 정세는 지역국가들간의 경

제적 상호의존성 심화와 군사·안보 측면에서의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군비경쟁 강화로 협력과 대립이 병행하는 二重構造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脫冷戰期 동북아 질서의 변화추세와 이를 토대로 한 1996년 동북아 안보정세의 특징을 분석한다. 또한 동북아 안보의 불확실성 감소와 평화체제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多者間 安保對話의 발전 현황을 살펴본다. 이러한 탈냉전기 동북아 질서 변화추세 및 1996년 동북아 안보환경의 특징을 기초로 하여 1997년도 동북아 정세를 전망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동북아 4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II. 脫冷戰期(1990~95) 東北亞 秩序의 變化趨勢

1990년에 접어들어 동북아 정세는 미·소간의 敵對關係 清算을 시작으로 우호와 협력이 증진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과 소련은 동북아 지역에서도 軍事的 對決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양국의 화해는 중국·일본 등을 포함한 동북아 4강의 상호관계 변화의 촉진제로 작용하였다. 고르바초프의 적극적인 친선외교에 의해 화해하게 된 소련과 중국은 경제교류를 확대하면서 국경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양측의 병력감축 문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일본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군이 점령한 북방영토 반환문제

가 관계개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일본이 政經分離原則을 내세워 소련에 대한 경제·기술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관계개선의 길로 접어들었다. 한편 일본과 중국은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군사·안보문제에 대한 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탈냉전 분위기가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은 중국과 북한 등 여전히 社會主義體制가 유지되고 있고, 남사군도와 일본의 북방영토 등 인접국간의 領有權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유럽지역과 같은 극적인 탈냉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지역에서의 미국과 러시아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반면, 중국과 일본이 군비경쟁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 안보에 대한 불확실성은 점증되고 있다.¹⁾

일본과 중국은 1990년대에 들어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하고, 1993년 5월에는 안보대화 개최에 합의하였으나 양국관계가 상호협력의 방향으로 순탄하게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자위대를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해외에 파병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원하고 있다. 일본은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핵무기 개발 잠재능력을 갖추기 위해 1993년 4월 핵연료 재처리 공장을 설치하고 핵무기로 전환이 가능한 다량의 플루트늄을 확보하였다. 또한 1995년 11월 일본은 「新防衛計劃大綱」을 확정하여 24만 자위대 병력의 군사전략 범위를 실질적으로 ‘專守防衛’에서 ‘地域防衛’ 개념으로 전환하였다.²⁾ 아울러 1996년도 방위예산을 1995년도

1) 李弘杓, “中日의 軍事大國化 움직임과 東北亞情勢展望,” 「政策研究」(1995. 2號), pp. 103-148 참조.

보다 2.58% 늘어난 4조 8,455억엔으로 책정하였다.

한편 중국은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를 전후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4년간 國防費를 연 12% 이상 증액하여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러시아로부터 첨단무기 및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1993년에는 지하 핵실험을 재개하고 1994년에도 90킬로톤급 지하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중국은 290만명의 총병력을 유지하며 군현대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상군보다 해군력과 공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邊境防禦 중심의 소극적 군사전략을 近海防禦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방어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은 1989년이래 매년 10% 이상 국방비를 증가시켜 왔으며 1996년에는 11% 증액하였다. 중국의 군비증강은 鄧小平 사후 예상되는 국내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체제수호자로서의 군부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국내정치적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³⁾ 중국의 海軍力 강화, 러시아로부터의 첨단무기 도입, 그리고 핵실험 재개 등 대외 팽창적인 성격을 지닌 군사력 강화는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는 주변국가들의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대만의 위기의식을 자극하였으며, 재무장을 주장하는 일본내 보수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켰다. 또한

2) 권호연, 「일본 신방위 정책의 분석 및 자료」 (서울: 세종연구소, 1996), pp. 3~29 참조.

3) Shannon Selin, *Asia Pacific Arms Buildups* (Canada: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994), pp. 10~15 참조.

필리핀·베트남·한국 등 인접국가들의 軍備增強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대만 정부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맞서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다량의 최신무기를 수입하고 있다. 이같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은 역내 국가들의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완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역내 국가들이 상호관계에서 협력과 갈등의 이중적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초강대국인 미국과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또한 협력과 갈등의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소련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되자 경제난으로 인해 국방비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느낀 부시(George Bush) 美행정부는 아시아 지역 駐屯兵力 14만에 대한 3단계 부분 감축안을 마련했었다.⁴⁾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반면, 미군 철수에 따라 생긴 힘의 공백이 결과적으로 역내 국가간 군비경쟁을 증대시켜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한 미국은 1995년 2월 새로운 동아시아 정책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신아·태전략의 주요 내용은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현재와 같은 10만명의 전력구조를 유지하며 이 지역에서 안정자, 均衡者 및 정직한 중재자의 역할을 지속한다는 것이다.⁵⁾ 이같은 세력균형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클린턴

4)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Dept. of Defense, April 18, 1990); 곽태환, “주한미군의 감축과 남북한 평화정착,” 함택영 공저,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pp. 278~279 참조.

5)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5); 金昌秀, “美國防部 新亞太安保戰略 報告書의 背景과 意味,”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구상은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외교정책을 수행함으로써 그 효율성이 의문시되었다.

미국은 1992년 러시아를 主援助 대상국으로 간주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옐친 러시아 대통령도 미국의 협력과 경제지원 없이는 자국의 경제개혁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親美政策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옐친 대통령의 급진적인 경제개혁 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러시아 정치권내에서 보수주의 세력의 입지가 점차 강화되었다. 러시아 보수주의자들은 옐친 대통령의 친미정책을 비난하며 러시아가 대외관계에서 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태도는 1994년 11월 중간선거 이후 共和黨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서부터 점차 덜 우호적이 되어가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원조의 효율성에 대해 회의적인 공화당의원들은 러시아와의 군축협정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장래가 불안한 러시아에 대한 원조를 지속하기 보다는 동구권 국가들을 NATO에 가입시킴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⁶⁾ 이같이 국내정치 판도의 변화에 따라 양국간 밀월관계가 깨어짐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동북아 지역에서 미묘한 갈등관계를 보이고 있다.

냉전체제하에서 중국은 미국의 對蘇 封鎖政策에 중요한 비중을

『週刊國防論壇』, 제573호 (1995.3.13), pp. 1~14 참조.

6) Jonathan Dean, "Losing Russia or Keeping NATO: Must We Choose?" *Arms Control Today*, vol. 25, no. 5 (June 1995), pp. 3~7 참조.

창지하였다. 냉전기간 동안 미국은 중국에 대해 무역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며 국내문제에 대해서는 개입을 자제하였다.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미·소간에 적대관계가 해소되어 중국의 전략적 가치는 크게 감소하였다고 판단한 미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를 계기로 중국 공산당정권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강화하였다. 미국은 最惠國待遇 조항이 1년마다 경신되어야 하는 조건을 무기삼아 중국에 인권개선과 무역장벽제거 등을 요구했다. 미국과 중국 모두 기존의 협력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양국간에는 무역불균형, 무기수출, 인권탄압, 핵실험 등을 둘러싼 외교적 마찰이 증대되었다.⁷⁾ 경제의 현대화를 위해서 미국과의 협력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느낀 중국 지도층은 이와 같은 사안들에 대해 비교적 타협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양국관계가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만문제가 부각되면서 양국관계는 악화되었다. 李登輝 대만총통이 1995년 6월 7~12일 미국을 방문하자 중국은 미국이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를 개시하였다. 한편 미국은 중국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봉쇄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밀착시켰다.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1994년 9월 러시아를 방문한지 8개월 만인 1995년 5월 재차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옐친과 정상회담을

7) David M. Lampton, "America's China Policy in the Age of the Finance Minister: Clinton Ends Linkage," *The China Quarterly*, vol. 139 (Sept. 1994), pp. 597~621 참조.

개최하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同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강력히 반대해 온 양국의 이란에 대한 원자로 제공 방침을 재확인하고 무기판매 등 군사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 기조는 일본 및 한국과의 양자간 안보 체제를 축으로 하여 多者間 安保協力을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러시아·중국과 갈등 양상을 보이는 한편, 일본과도 자동차·금융 시장개방 및 방위비분담 문제 등으로 빈번한 외교적 마찰을 겪었다. 이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冷戰時代의 공감대가 사라진 지금 미·일간 안보동맹이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클린턴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의 적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⁸⁾ 이들은 중국의 팽창보다 일본을 진정한 동맹으로 신뢰하지 않는 미국의 태도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유지에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클린턴 행정부에 대해 미·일안보조약의 평화적 해체 또는 대폭적인 수정을 권유하였다.

8) Chalmers Johnson and E. B. Keehn, "The Pentagon's Ossified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74, no. 4 (1995), pp. 103~114 참조.

Ⅲ. 1996年 東北亞 安保情勢의 特徵

역내 국가간 정치·군사적 불신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은 1996년도 동북아 안보에 최대 위협요인으로 대두되었다. 중국은 3월 23일 대만에서 최초로 실시된 총통 직접선거 과정에서 대만독립 주장이 대두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대만의 양대 항구인 基隆과 高雄港 부근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위협은 중국 내부에서 고조되고 있는 민족주의·애국주의 분위기 및 군부의 정치 영향력 강화 추세와 맞물려 전개된 것이었다. 그러나 대만의 지리적 위치와 정치·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대만문제는 중국과 미·일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동아시아 역내국가들의 海路安全에도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에 미국 의회는 3월 21일 「중국의 대만 공격시 미국의 군사개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3월 28일에는 「대외관계 수권법안」을 통과시켜 클린턴 행정부에 대해 대만과의 관계격상 및 대만에 대한 軍事武器 제공확대 압력을 가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만해협 인근에 두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하여 중국의 군사행동을 견제함으로써, 중·미관계는 군사충돌 직전의 위기상황으로까지 악화되었다.

대만사태는 미·일간 안보동맹을 강화하는 자극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⁹⁾ 미국과 일본은 1996년 4월 15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물

품·서비스 相互提供協定」(ACSA)을 체결하여 미·일 공동훈련시 무기·탄약을 제외한 연료·식량·물품과 수송·수리·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총 15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곧이어 4월 17일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미·일 양국은 최근 한반도를 비롯한 아태지역에서 군사력 증강 및 무력시위 등의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동북아 지역의 유사시에 대비하는 방위협력과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도모하는 주 내용으로 하는 「新安保共同宣言」을 채택하였다. 미국은 同 선언에서 아태지역에서 47,000명의 주일미군을 포함하여 10만명의 미군병력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일본지역 주변 유사시에 대비한 「美·日 防衛協力指針」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과 일본이 신안보동맹을 선언한 것은 중국이 동북아 지역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견제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선언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신안보공동선언」이 일본의 군사적 팽창욕구를 억제하고 이완된 미·일 양국간 동맹관계를 회복하는 데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이 기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중국 지도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밀착시켰다. 중국과 러시아는 4월 25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21세기를 향한 戰略的 同伴者關係와 상호 신뢰 및 협력 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는 러시아 수호이(SU)-27 전투기의 라이선스생산, 잠수함 및 신형공격기

9)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6-1997* (Oxford, 1996), pp. 170~172.

슈퍼7의 공동 개발·검토 등에 합의하였다.¹⁰⁾

중·러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형성이 가능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첫째, 국경선 주둔병력 감축협상을 통해 양국간 信賴構築이 점진적으로 착실하게 실현되었다. 둘째,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를 저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양국간에 형성되었다. 셋째, 미국 주도하에 있는 NATO의 확대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중국이 지지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함으로써 미·일 주도의 동북아 안보체제에 묵시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양국 공히 미국과 적대적 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 바, 양국의 군사협력은 제한적 성격을 지닌 것이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과도한 접근은 서방으로부터의 경제협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중국 또한 국내경제 발전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 서방국가들을 자극하면서까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1996년도 상반기 동북아 정세는 미·일 對 중·러 대립으로 가시화되는 듯한 경향을 보였으나 下半年에 들어 중국과 미·일간의 관계가 점차 개선되면서 동북아 지역은 긴장완화 기미를 보이고 있다.

클린턴 美대통령은 재선 이후 미·중 갈등관계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 또한 미국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10) 金永椿 外,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6.5), pp. 15~20 참조.

방향으로 정책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양국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1996년 11월 19~21일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의 중국방문과 11월 24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미·중 정상회담에서 표출되었다. 遲浩田 중국 국방장관의 12월 5~18일 미국방문도 미·중간의 긴장완화 분위기를 반영해주고 있다.

일·중관계 또한 양국 지도부의 빈번한 접촉과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하반기에 들어 개선되고 있다. 일본은 6월 8일 중국이 실시한 핵실험이 지역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중국에 대한 政府借款 제공 협상을 결렬시켰다. 그러나 중국이 7월 29일 핵실험 중단을 발표한지 4개월 후 11월 24일 일본은 중국에 대해 엔차관 재개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일·중간 마찰이 점차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IV.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 推進 現況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다. 경제적 번영과 함께 역내국가들간의 경제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資源貧國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한국·미국·일본의 자본 및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은 한·중·일 등 동북아 지역의 시장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와 같은 동북아 지역경제의 상호의존도 심화는 역내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불신과 안보 불안을 해소시켜줄 만큼 강력한 地域統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는 전쟁을 예방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심어 줌으로써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기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동북아 질서의 多極化, 군비경쟁의 증대, 역내 국가간 경제의존도 심화 등 탈냉전 시대에 발생하는 새로운 현상들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 지역에는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민간인 학자 및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거나 또는 민간인 전문가와 정부관료가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Two Track 형태의 안보대화 채널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아지역 다자안보대화를 이끌고 있는 Two Track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기구로는 「동북아협력대화」(North-East Asia Cooperative Dialogue: NEACD)를 지적할 수 있다.

NEACD는 1993년 3월 북한의 NPT탈퇴에 따른 동북아 지역 긴장고조 및 1993년 7월 클린턴 미대통령의 「신태평양공동체」 구상발표를 계기로 창설되었다. 미국무부의 지원아래 샌디에고 대학 산하 「국제분쟁협력연구소」는 1993년 7월 남·북한·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6개국의 정부관리 및 민간인 학자를 초청하여 비공개로 NEACD 설립에 관한 준비회의를 개최하였다.¹¹⁾

11) 김국진,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레짐과 한반도 안보,” 「한반도 군비통제」, 1995년 10월, pp. 32~33 참조.

1993년 10월 샌디에고에서 개최된 1차 회의에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5개국의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관리들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하여 동북아지역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민간인과 정부관리 공동의 상설협의체 건립원칙에 합의했다. 북한은 7월 준비회의에 참가하였으나 10월 본회의에는 불참하였다.

1994년 5월 동경에서 개최된 2차회의에서 동북아 5개국은 방어적 군사전략 추구 및 인사교류 확대 등 동북아 지역 신뢰구축 방안에 관해 협의하였다.

1995년 4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3차회의에서는 상호 신뢰보장조치(Mutual Reassuaranace Measures: MRM) 및 동북아 국가관계에 적용될 원칙(Principles of State to State Relations) 문제를 검토할 2개 study group을 설치하고 그룹별로 각국 학자 1명씩을 참여시키기로 합의되었다.

1996년 1월 북경에서 개최된 4차회의에서 5개국은 「상호 신뢰보장조치」와 「국가관계 원칙」에 관한 의장 요약문을 채택하여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가 보다 조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상호 신뢰보장조치」 연구반이 군사정보 교환·비상통신체제 수립·해상 안보대화 등 상호 신뢰구축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중국측이 구체적인 신뢰구축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군사교류·협력 조치만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동북아 5개국은 「국가관계 원칙」 연구반이 제출한 주권존중·내정 불간섭·무력사용 금지·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국가관계의 기본원칙에 대부분 합의하였으나,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측의 반대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미국은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을 포함한 역내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정례협의체인 「동북아 안보대화」의 창설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다자간 안보대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미·일·중·러 4국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어 다자간 안보회담이 쉽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탈냉전 이후 민족주의 강화 추세로 인하여 일본 北方 4個島嶼 반환문제, 중·러 간 변경문제, 釣魚臺列島 영유권문제 및 한·중·일간 어업문제 등 영토 및 국경문제가 동북아 질서안정을 저해하는 잠재요인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바, 다자간 안보대화가 제도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V. 1997年 東北亞 情勢 展望

1997년 새로 출범하는 클린턴 2기 행정부는 국내정치보다 외교 문제에 비중을 두고 대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지역에 대해서는 미·일 안보동맹을 축으로 하여 역내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중국과 북한에 대한 包容政策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일관계는 오키나와 기지 축소문제 및 경제·통상문제로 마찰을 겪을 것이나, 안보면에서는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에 입각하여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특히 미·일 양국은 한반도 및 대만해협 등 극동지역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후

방지원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서 「美·日 防衛協力指針」에 대한 개정작업을 1997년 하반기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턴 재선이후 미국은 중국과 갈등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對中 包容政策 채택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도 1997년 15차 당대회 개최와 홍콩주권 회수 등 대내 정치일정을 고려하여 미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1997년 상반기 고어 美부통령의 중국방문과 11월 江澤民 주석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지역안정과 경제 문제 등에 관한 정치적 타협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양국은 대만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차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내 민족주의 강화 추세와 미의회의 反중국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양국간 불신은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997년 일·중관계는, 국교정상화 25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상 상호 교환방문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고, 일본이 중국에 대해 無償援助와 엔 借款을 증대할 것인 바,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간 장기간 지속되어 온 지역질서 주도권 경쟁 및 대만 이등회 총통의 일본 京都大 방문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양국간 상호 전제적인 외교 행태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대화와 협조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유지되면서도, 러시아의 독자 실리외교 추세가 강화되어 선택적·사안별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러 양국은 영토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실익이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으로 관계개선 노력을 추진할 것이다. 러시아로서는 경제난 극복과

改革政策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일본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을 절실히 원하고 있지만, 러시아 정국의 불안으로 인해 일본의 대러시아 투자가 급격히 증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러관계는, 1997년 4월로 예정된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국경선 부근의 경비병력 감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安保協力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양국간 경제협력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VI. 結 論: 東北亞 4國의 對韓半島 政策 展望

1997년 동북아 안보정세는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 4국간의 화해분위기의 확대는 1996년 4월 16일 한·미 양국이 제주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제의한 남북한과 미국·중국의 「4者會談」 성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미·일·중·러의 對한반도정책 또한 國益優先의 이중성을 깔고 있어 남북관계 진전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주변 4국간의 협력증대는 일반적으로 남북한의 긴장완화에 기여하겠지만 이들의 대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의 현상유지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1997년 미국은 북한체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에 대해서는 4자회담 수락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쌀 지원 등 대북 지

원 재개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이 대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대북정책의 속도와 범위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견해차이가 표면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양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연합군의 戰力과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1997년에도 일본은 대북정책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한·미와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한·일간에는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비 분담과 관련하여 이견이 노출될 수도 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및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불편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15차 당대회 등 국내 정치일정을 고려하여 주변정세의 안정에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할 것이다. 한·중간 정치적 협력관계는 1997년 4월과 8월에 개최될 예정인 양국간 외교정책 협의회와 외무차관급 안보대화를 통하여 보다 강화될 것이다. 한국과의 관계가 증진되면 중국은 4자회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다.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는 중국이 9차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과의 경협 확대를 원하고 있는 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러시아의 남북한 등거리 외교 및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주장 등으로 인해 1997년 한·러관계는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는 답보상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 防産物資 도입을 통한 한·러 군사협력은 지속될 것이다. 아울러 양국간 경제교류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제1주제 토론: 동북아 안보정세와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 전망

사 회: 여인곤(국제연구실 실장)
발 표: 김국신(국제연구실 책임연구원)
토 론: 김유남(단국대)
김창수(KIDA)
백진현(외교안보연구원)

여인곤: 그럼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들께서 토론과 질문을 해주시고 김국신박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남: 김박사님의 논문은 동북아 안보분야 연구자들의 이견이 없을 정도로 주변4강의 상호관계 및 국익추구 과정을 빈틈없이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보고서일수록 “그래서 어떻다는 것이냐”(so what?)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Hudson연구소의 유럽 안보상황에 대한 최근의 한 연구가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하나의 분석틀(framework)을 제시하고 있는 바, 좋은 모델케이스라고 판단되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Hudson 보고서는 유럽의 현 안보상황과 관련, 다음과 같은 4가

지 테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개입(engagement)과 유럽의 확장(enlargement) 둘째, 미국의 개입과 유럽의 혼선 셋째, 미국의 개입과 유럽의 불화 넷째, 미국의 개입과 유럽의 다이나믹(dynamics)이라는 분석틀입니다. 이러한 분석틀은 비록 동북아와 유럽의 상황이 다르지만 동북아 안보문제에 접근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지역도 미국의 지배적 지위(domination)는 유럽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동북아지역의 확장, 혼선, 불화, 그리고 다이나믹은 무엇이나는 것입니다.

김박사님 논문은 주변4강간의 관계에 평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 보다는 미국의 지배적 역할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이와 관련, 일본의 경우는 이미 확장정책(enlargement policy)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대응세력(counter-checking force)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적어도 스포일러(spoiler)로서의 역할에는 충실할 수 있다는 인상이며, 북한은 와일드카드(wild card)로 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 이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으로서 적어도 우리에게 5강중의 하나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변4강과 관련한 각종 데이터를 나열할 것이 아니라 이를 '조리'하여 '요리'(dish)로서 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지배적 역할이 '97년도에 얼마만큼 유지될 수 있겠냐는 점

에 대해 김박사님의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김창수: 김박사님 논문은 동북아 주변4강간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균형있게 잘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저는 두가지 코멘트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미국의 영향력 감소라는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미국의 영향력이 실제로 감소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현재 동북아에는 여전히 10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win-win전략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군사적인 개입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둘째,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의 배경에 대한 것입니다.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은 '95년 11월에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 미루어졌던 것인데 원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미·일동맹의 재조정문제였습니다. 당시 일본내에서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미·일동맹을 재고하고 독자적인 위상을 추구하자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선언도 사실 중국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일본을 미국이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평가됩니다. 내용의 비중에서도 일본측안에는 PKO참여 등 역할증대가 주된 내용이었으나 이후 미국과의 조정과정에서 미·일동맹이 초가 되고 역할증대 부분이 從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박사님은 클린턴이 '97년도

에는 외교정책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하셨는데 내년 4월이 지나야 부차관보까지의 외교실무진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관망의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바, 클린턴이 외교정책에 중점을 둘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내년도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최대 과제는 외교정책보다는 '균형예산법' 통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까지 연방예산의 균형을 맞추려면 국방비 삭감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win-win전략도 재검토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미·북관계가 연락사무소 개설 등으로 진전되게 되면 국방비 삭감, 주한미군 감군 논의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백진현: 동북아 정세는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주제이고 전망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1년반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정세전망이 낙관적이었으나 지난 1~2년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미·중관계는 최악의 상황이었고, 일·중관계도 관계정상화이후 가장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전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바, 동북아 정세의 결정요인(factor)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분석틀(framework)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동북아 안보환경과 관련 흔히 유럽과의 비교를 많이 하는 바, 지역내 불안정이라는 점에서 양 지역은 비슷하지만 국내적인 차이(소위 second image)가 양 지역의 차이를 배태하는 요인입니다. 우선 동북아안보의 결정요인으로서 국내구조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럽국가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된 형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들간의 제도적 결합도 긴밀합니다. 반면 동북아에서도 다자적 제도가 출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북아 안보상황의 결정요인은 주요국들의 국내상황과 더불어 양자적 관계가 아닌가 합니다.

김박사님은 동북아 4강간의 양자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6개의 축을 제시하고 있는데, 6개의 양자관계를 같은 평면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priority)를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북아 양자관계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일, 미·중, 일·중관계이며 그중에서도 미·중, 미·일관계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미·일, 미·중관계가 어려웠던 이유는 미국 태도의 모호성과 아시아에 대한 경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지며 이는 내년에도 크게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미·일관계는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중국과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연착륙(soft-landing)정책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해 '두개의 한국정책'이니 '중국견제용'이니 하는 주장들이 있지만 미국이 대한반도정책에 그 정도로 비중을 주지는 않는다고 할 때, 어찌보면 상당히 소박한 정책으로도 보입니다.

김국신: 동북아안보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나열할 것이 아니라 조리된 분석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김유남교수님의 지적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럽과 동북아의 안보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교수님은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미국의 지배적 지위를 강조하시지만,

동북아에는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제도적 틀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자간 안보대화도 언제나 제도화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해양세력에 머무르고 있으며 단지 4강중의 한 세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이지만 그것이 어떤 지역에 투사되는 능력은 지역자체의 역동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서 동북아는 어디까지나 4강간의 세력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실제로 감소하였느냐는 김창수박사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미국 국력의 상대적 쇠퇴는 기정사실로 놓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균형자 역할을 강조하며 역내 영향력 유지를 천명하고 있지만 이를 단순하게 인정하는 것은 자칫 미국의 홍보적인 면을 여과없이 받아들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이 미국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일간의 관계만 강조하다 보면 동북아안보의 전체구조를 간과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이 이니셔티브(Nye initiative)는 미국의 영향력 연장 차원에서 볼 수도 있지만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군감축 및 일본에 대한 통상마찰증대 등으로 인한 일본이 미국을 보는 불안감, 즉 미국이 고립주의 정책을 택하지 않을까 하는 일본측의 의구심 해소 차원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안보팀 구성에 따른 문제에 대한 김박사님의 지적은 적절하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클린턴 행정부가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기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클린턴이 국내문제에서

특별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화당이 스캔달이나 선거자금을 몰고 늘어지면 클린턴은 국내문제를 만회하기 위해 대외정책에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미·중관계를 적극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균형예산법에 대한 지적이 있으셔서 언급하자면, 미국의 재정적자를 고려할 때, 국방비 삭감으로 인해 win-win 전략의 성공적 수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개입과 확대」 전략도 적극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 영향력의 상대적 감소라는 평가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백교수님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동북아 안보구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단일 개념 또는 분석틀에 의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김창수: 동북아 안보상황 및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논하는 데 있어서 민족주의적 성향에 치우치는 평가는 곤란하지 않은가 합니다. 한편, 중국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너무 과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유남: 미국의 영향력 감소는 일단 차치하고 과연 미국없이 우리 의지대로 남북한문제를 다룰 수 있느냐는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백진현: 균형자(balancer)와 안정자(stabilizer)에 대한 개념상의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역내 안정자로서의 자국의 역할

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자국이 일본과의 동맹을 통한 안정추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Foreign Affairs」지에서 'deep/dis-engagement'에 대한 논쟁에서 조셉나이가 주장한 것은 균형자가 아니라 안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국신: 동북아 전체에 대한 미국의 역할문제와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평가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있고 북한과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회피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있어서 미국의 도움은 불가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북정책에 관한 한·미간 불협화음을 고려할 때, 한·미 공조체제의 강화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대내외 동향과
남북관계 전망, '96~'97

최진욱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북한의 대내외 동향과 남북관계 전망, '96~'97

최진욱(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 목 차 >

- I. 서 론
- II. 대내정세
- III. 대외동향
- IV. 대남동향
- V. 결 론

I. 서 론

본고는 1996년 북한의 대내외 상황 및 정책을 분석하고 1997년 북한정세를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년에도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었으며, 탈북자의 증가와 사회일탈현상 등으로 북한체제의 정치적 안정에 대한 회의까지 대두되었다. 한편 김정일은 군관련행사에 집중적으로 참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그의 건재를 과시하였으며,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분조

도급제의 개선과 농민시장허용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 대외적으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중국·러시아와의 유대관계도 유지·강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은 경제난해소를 위해 당국·비당국분리 정책을 구사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남한배제전략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9월의 잠수함침투사건으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본고는 북한정세를 대내정세, 대외동향, 대남동향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내정세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대외동향은 북한의 대미·일·중·러 관계로 나누어 분석되어진다. 끝으로 북한의 대남동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II. 대내정세

1. 권력승계 및 이념

김일성 사망 2주년을 맞은 1996년에도 김정일은 당총비서 또는 주석직에 공식 취임하지 않았으나, 군최고사령관 직책으로 실질적 통치를 지속하였다. 김정일은 최광, 이을설 등과 함께 「사로청대표자회」¹⁾ 폐막식 참석(1.19) 이래 총 48회(12.26 현재)의 각종 공

1)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로청)」은 이 대표자회의를 계기로 「김일성사회주

식행사에 참석하였다. 이같은 활발한 활동은 김일성 추모 분위기를 승계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금년도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징은 그가 군부를 체제수호의 보루로 간주, 군부의 위상제고를 위한 활동에 주력했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금년 중 군부대 방문 18회, 군관련 행사 16회 등 총 34회에 걸쳐 군위무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는 김정일이 참석한 공식 행사 중 3/4에 달하는 것으로서 그의 군위상 제고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해 주고 있다. 김정일은 최광, 이을설, 조명록, 김영춘, 이하일, 김명국,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등 군부 핵심인사들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군부와의 유대를 과시하였다.

군중심의 권력행사는 김정일이 국가전반에 걸쳐 김일성과 같은 권위와 카리스마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다. 김정일은 김일성처럼 초월자의 지위에 서기 보다는 군부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는 입장에서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일은 군부의 입장이 중요시되는 정책들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되고 그만큼 그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운신의 폭이 제약받게 되는 셈이 된다. 즉 김정일이 최고사령관이란 직함으로 공식적인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만큼 그의 자율적인 정책선택의 폭은 줄어들고 특정 정책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새로운 이념적 혹은 정책적 노선을 제시하는 대신에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김정일에게 전이하는 작업과 함께 그의

의청년동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독자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작업을 지속하였다. 특히 ‘붉은기 철학’을 새로이 제기하여 김정일의 사상가적 면모를 강조하고 김일성과의 制限的 差別化를 시도하였다.²⁾ ‘붉은기 철학’이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기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자주와 창조의 철학으로서 김일성 주체사상으로부터의 변형은 아니나 김정일이 혁명의 먼 미래를 바라보고 역사상 처음으로 내놓은 철학이라는 것이다.³⁾

김정일에 대한 독자적 이미지 구축 작업은 그의 생일(2.16)과 당 사업시작 기념일(6.19)을 즈음하여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김정일의 32년 당사업의 역사를 “위대한 영도자의 자랑찬 연대기”라고 선전하고,⁴⁾ 그를 “걸출한 사상이론가이며 철학자형의 위인”으로 우상화하기도 하였다.⁵⁾

또한 김정일 스스로는 신세대에 대한 그의 이미지 구축작업을 시도하여, 사회주의권의 붕괴과정을 예로 들면서 혁명 3, 4세대들이 혁명 1, 2세대의 업적을 이어받느냐의 여부가 사회주의의 운명을 좌우한다면서 청년학생들의 사상무장을 강조하였다.⁶⁾

김정일에 대한 이미지 구축 작업은 병사 뿐만 아니라 모든 인민이 ‘총폭탄’이 되어 그를 옹위해야 한다는 통속적인 구호에 의해 극치를 이루었다. 이것은 북한이 군사 지도자로서의 김정일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 「당보, 군보, 청년보 공동사설」, 1996.1.1.

3) 「로동신문」, 1996.1.9.

4) 「로동신문」, 1996.2.1.

5) 「중앙방송」, 1996.6.18.

6) “김일성 동지의 청년운동 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자,” 「청년전위」, 1996.8.24.

1997년 북한은 김정일 최고지위 취임 분위기 조성을 위해 김정일의 사상가적 자질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군우대 및 사기진작을 통한 지지확대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최고지위 취임과 관련, 김정일은 최고지도자로서의 권위 확보에 대한 자신감 여부는 물론, 경제난 해결 및 북·미관계 개선 속도를 고려, 그의 등장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경제동향

1996년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은 인민생활을 높이고 사회주의 경제토대를 다지기 위해 농업, 경공업,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었다.⁷⁾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알곡생산 증대, 경공업부문에서는 생필품 증산, 대외무역부문에서는 수출품 생산 증대를 강조하였으며, 석탄공업, 금속공업부문과 철도운수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고, 이와 함께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절약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1995년에는 1994년의 -1.7%에 비해 더욱 감소한 -4.5%의 실질경제성장률(GNP 기준)을 보임으로써 6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표 1> 참조).

7) 「당보, 군보, 청년보 공동사설」, 1996.1.1.

<표 1> 북한의 국민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경상GNP(억 달러)	231	229	211	205	212	223
1인당GNP(달러)	1,064	1,038	943	904	923	957
실질경제성장률	-3.7	-5.2	-7.6	-4.3	-1.7	-4.5

자료: 통일원,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종합평가」, (1994);
한국은행, 「1995년 북한 GDP 추정결과」, (1996.6).

더욱이 금년은 1993년 12월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에 따라 설정하였던 완충기(1994~96)의 종료년도임에도 불구하고 완충기 정책의 성과나 향후 계획에 대한 공식적 발표가 없었다. 이는 완충기의 주요 과제인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경제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농업부문은 봄철의 냉해로 곡물 파종 시기가 2주 이상 지연되었으며, 7월 하순의 폭우로 인한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입은 결과, 금년 곡물 생산량은 370만톤(95년 생산량은 345만톤, 평년 생산량은 약 400만톤)을 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연간 곡물 수요량은 약 670만톤 정도이며, 금년에 기확보된 중국으로부터의 곡물 도입량(무상지원분 포함) 50만톤과 여타 지역으로의 지원 및 수입량을 감안하면 북한의 곡물부족분은 200만톤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북한은 1997년에도 심각한 식량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판

단된다.⁸⁾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부문은 금년에도 원유와 전기를 포함한 생산원자재 부족, 수송부문 병목현상, 경제침체에 따른 근로자 사기저하, 인센티브체계 결함 등의 요인이 지속됨에 따라 가동률이 30%수준에 머무는 저조한 양상을 보였다. 광공업 부문의 부진요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에너지 부족문제이다. 정상적인 산업 가동률을 가정할 경우 북한의 연평균 원유수요량은 250~300만톤 규모로 추정되나, 1995년의 경우 경수로 지원용 유류 15만톤을 포함, 총 유류 도입량은 125만톤 수준에 머물렀다. 금년의 유류공급 상황 역시 전년에 비해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1997년에도 북한의 극심한 원유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한편 지리적 환경 및 근로자 소득수준 등이 더욱 열악한 광업부문에서의 원자재 부족, 근로자 사기저하, 설비노후 등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므로 북한 에너지원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석탄 채굴 산업 역시 매우 저조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1997년에도 채탄산업 부진에 따른 전력생산 차질로 인해 북한 제조업 부문의 산업가동률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건설부문에서는 재정부족으로 대규모 건설사업보다는 탄광 갱도, 농업용 저수지, 도로의 개축사업과 나진·선봉 지역 외자유치를 위한 일부 기초사업을 포함한 소규모 위주의 단위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전반적으로 1995년에 비해 더욱 위축된 양상을 보였다. 북한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나진·선봉 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8) 북한 곡물 생산 및 수요량은 통일원 평가치임.

위한 외자유치도 계획과는 큰 차질을 보이고 있으므로, 북한의 건설부문 침체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에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바, 1995년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20.5억 달러로 1994년에 비해서 6,000만 달러 줄어들었고, 이러한 대외무역 감소추세는 1996년에도 지속되었다.

<표 2> 북한의 대외무역

(단위: 억 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교역규모	47.2	27.2	26.6	26.4	21.1	20.5
수출	19.6	10.1	10.2	10.2	8.4	7.4
수입	27.6	17.1	16.4	16.2	12.7	13.1

자료: 한국은행, 「1995년 북한 GDP 추정결과」 (1996.6).

금년 상반기 북한의 무역실적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교역이 감소됨으로써 전체규모 역시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하였다. 수출은 1995년 동기보다 13.3% 감소한 2.6억 달러, 수입은 5.0% 감소한 5.7억 달러, 수출입총액은 1995년 상반기의 9.0억 달러에 비해 7.8% 감소한 8.3억 달러인 것으로 잠정 추계되었다.

금년에는 그 동안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던 남북한간의 물자 교역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1994년 1억 9,455만 달러(통관기준)에서 1995년에는 2억 8,729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1996년에는 1~9월 동안 1억 9,475만달러를 기록함으로써 1995년 동기실적 2억 2,594만 달러에 비해 14% 감소하였다. 교역규모에 있어서 남한은 중국, 일본에 이어 북한의 3대 교역 상대국의 위치를 유지하였다.

한편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대외개방정책과 외자유치의 일환으로 외자유치 관련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으며,⁹⁾ 나진·선봉지대의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나진·선봉지대 개발과 관련하여 북한은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초기 투자가 적게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며, 단순하고 쉬운 사업부터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개발의 우선순위를 중계수송업, 관광업, 공업부문 순으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나진·선봉지대 개발을 위한 기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진호텔의 마무리 공사, 신해지구내 관광여관건설, 비파지구 관광도로 확장공사 등의 진척상황은 매우 부진한 상태이다.

투자설명회에서 북한이 밝힌 바에 의하면, 금년 8월까지 나진·

9) 1995년 12월 이후 제정된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법령으로는 「합작법시행규정」(95.12.4)과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95.12.4)을 비롯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명칭제정규정」(2.1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규정」(2.14) 등이 있다.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한 규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2.14),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공인조각 및 등록규정」(3.28), 「자유경제무역지대 공업지구 개발 및 경영규정」(4.30), 「자유경제무역지대 광고규정」(4.30), 「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7.15), 「자유경제무역지대 청부건설규정」(7.15),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7.15) 등이 제정되었다.

선봉지구에 대한 투자유치실적은 계약실적 49건에 3억 5,000만 달러, 실제투자자는 22개 사업에 3,400만 달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진·선봉지대 현지에서 개최된 국제투자포럼(9.13~15)에서 2억 8,200만 달러 상당의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 주요 합영합작 실적은 조선 대성은행과 홍콩페레그린사가 운영하는 합영은행 「페레그린-대성은행」의 개설과 (주)대우와 조선삼천리총회사가 합영으로 설립한 남포공단 「민족산업총회사」의 조업개시 정도이다. 1996년 북한은 대외경제관계에 있어서 생산부문의 비교우위 개발에 의한 경제회생보다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원획득에 역점을 두었으며, 나진·선봉지역의 외자유치 실적도 극히 부진하였다.

종합적으로 보아, 1996년에도 북한당국은 총체적인 경제난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절약강조, 노력선동에만 의존하는 등 기존 체제내에서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 또한 2년 연속된 수재와 집단적 영농체제로 인한 인센티브 결함, 농업원자재 공급난 등의 요인으로 식량사정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생필품 공급 감소로 인해 주민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사회 전부문에 걸쳐 근로자의 노동의욕 감퇴, 당국의 경제통제력 저하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비공식부문 경제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였으며, 계획부문의 물자가 불법수단을 통해 암시장 등으로 유입됨으로써 공식배급망의 물자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최근 북한주민들 대다수는 생필품 수요의 70% 이상을 암시장이나 불법수단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7년 북한경제는 전반적으로 보아 1996년 수준이하로 쇠퇴할 것이며, 주민들의 생활난 극복을 위한 자구책으로 확산되어 온 비

공식부문 경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당국은 정치적 불안요소가 개입하지 않는 한 생존수단의 일환으로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을 묵인할 것이나, 제도적인 경제체제 개혁 조치를 채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인 체제개혁조치 없이 북한경제의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3. 사회동향 및 인권실태

김일성 사망 2주년을 맞이한 올해에도 북한은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선전선동과 사회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강화하였다. 인권문제의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응하여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반론을 제기하거나 남한인권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자신의 인권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1996년 ‘붉은기 철학’을 내세우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재해석한 ‘장군님의 한식술론’을 전개하면서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권 붕괴 및 김일성 사망으로 북한사회는 정신적 무질서 상태에 빠져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주민 및 지식층의 탈북사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탈북자를 ‘혁명을 버린 비겁자’로 매도하는 한편, 김정일 중심으로 ‘일심단결’하여 ‘제국주의 책동’을 분쇄하자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유지하고 외부사조의 침습을 방지”하고자 각종 총화와 학습강연을 전개하였다.

또한 북한은 제국주의 사상과 문화를 철저히 배격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체제를 지켜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국주의 사상·문화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을 역설하였다.¹⁰⁾ 이밖에도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 ‘혁명적 의리,’ ‘동지애’ 등의 선전구호를 내세우며 사회동요 방지를 위해 부심하고 있다.

금년에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과 체제결속을 위한 선전선동이 강화되어 청년학생들의 소위 「인민군대 입대 탄원대회」가 평양, 개성, 신의주 등지에서 연달아 개최되었으며,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 3주년을 경축하는 「충성의 맹세모임」, 「경축야회」 등의 행사가 개최되었다(4.9). 또한 소년단 창립(6.6) 50주년에 즈음하여 「축복의 편지 이어 달리기」를 처음으로 진행하여 청소년들의 김정일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촉구하였다.

같은 목적으로 북한은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을 심장 깊이 간직하고 김정일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드는 주체형의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할 것”을 촉구하고,¹¹⁾ “김정일을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참다운 충신이 될 것”을 호소하였다.¹²⁾

북한에는 언론·출판·집회·결사·종교·거주이전 등 시민적 자유와 권리가 철저히 제한되고 있으며, 특히 정치범수용소는 가장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관리소’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는 이 정치범수용소는 국가안전보위부 농장관리국이 반국가사범 또는 반민족범죄자로 분류된 정치범들을 관리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는 현재 평

10) 「로동신문」, 1996.5.30.

11) 「중앙방송」, 1996.8.21.

12) 「로동신문」, 1996.8.15.

남 개천의 14호 관리소, 함남 요덕의 15호 관리소, 함북 화성의 16호 관리소, 함북 회령의 22호 관리소, 함북 청진의 25호 관리소 등 5개소에 10~20만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996년에는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 러시아와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중국공안당국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¹³⁾ 강제송환된 탈북자수는 94년과 95년 2년간 140명에 달하였으며, 금년에도 48명이 이미 송환되었고 30여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1960년대 초반 북한과 체결한 「밀입국자 송환협정」에 근거하여 탈북자들을 강제송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사형에 처해지거나 ‘민족반역자’로 분류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다. 따라서 중국내 은둔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한국대사관이나 한국기업인들 혹은 종교인들에게 개인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생존의 길을 스스로 모색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이들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교(朝僑)나 북한 특무에 의한 신변안전 위협에 따라 홍콩이나 베트남과 같은 제3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다.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EU 의장국인 이태리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북한의 정치적·종교적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¹⁴⁾ 이태리는 북한을 포함한

13) 「동아일보」, 1996.12.26.

14)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 3.18~4.26, 제네바.

50여개 국가 및 지역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이산가족문제 및 양심수 구금 등 북한내 다양한 인권침해 현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의 설명을 통해 북한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가까운 장래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함으로써 북한내 표현의 자유제한에 대한 간접적인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답변권 행사를 통해 북한내에는 인권문제가 전혀 없다는 기존의 주장만을 반복하였다.

1997년에도 경제난으로 인해 중앙배급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암시장 등 사적 부문이 활성화되는 한편,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통제기구의 증설·강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자재 및 식량의 사적 거래, 주민들의 개인이익 추구, 뇌물수수, 절취, 줌도둑 등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일탈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바, 경제난이 완화되지 않는 한 당국의 사상교양을 통한 대주민 설득은 한계가 있을 것이며, 사회통합 확보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은 부정부패 및 사적 거래와 관련된 경제사범을 극형에 처함으로써 국가의 사회통제능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나, 식량구입 목적의 주민자유이동 및 대외 밀무역 목인, 그리고 터발과 패기발 경작, 농민시장내에서 식량 및 생필품의 사적 거래 허용 등은 중장기적으로는 체제변화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4. 군사동향

1996년 군사력에 있어서 북한은 여전히 남한에 비해 수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상 국방규모에 있어서 한국이 북한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고 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유지관리 임무포기」 선언 이후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군사분계선 작전지역에서 의도적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시위성 군사활동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북·미잠정협정 체결' 제의(외교부, 2.22) 이후, '정전협정 파기 위협' 비망록 발표(판문점대표부, 3.9), '비무장지대 유지 불가, 대응책 강구 예정' 담화발표(김광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3.28), 'MDL/DMZ 의무포기' 선언 (판문점 대표부, 4.4) 등을 연이어 내놓았다. 특히 북한군은 연속 사흘간(4.5~7)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에 무장병력을 투입하여 기관총·박격포 등 중화기 진지를 구축하였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전쟁준비와 관련된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노력을 지속하였다. 한·미 연례군사 평가회의¹⁵⁾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체제하에서도 군사력 증강 우선 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장사포나 다용도 미사일 개발, 소형 잠수함 건조 등 실질적인 전력 증강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북한의 병력은 105만 5천명으로 작년에 비해 1만 5천명이 늘어났으며, 총군단 수도 19개에서 20개로 증편되었다. 특히 북한 지상군은 휴전선 접

15)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96.9) 분과회의에서 한 보고.

경인 황해북도에 1개 지구사령부를 정규군단으로 증편함으로써 각 도에 1개 이상씩 「완전임무형」 군단을 확보하여 각도별로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북한은 공세전력을 전진 배치시키면서 기습공격 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MIG-17/II-28을 대규모로 전방배치하여 약 6분대의 서울 기습공격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¹⁶⁾ 또한 북한은 초전화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170/240mm 장사포를 전방지역에 증강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주요 항만에 기뢰를 부설한다든가 기습침투를 가능하게 하는 잠수함, 잠수정, 고속상륙정 등의 증가도 뒤따르고 있다. 북한은 기습상륙 강화를 위한 연안 작전용 소형 잠수함, 공기부양정 등 10 여척의 함정이 추가 건조되어 총 800여 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은 남한의 동원능력을 마비시키기 위한 10만여 명의 특수전 부대를 운용하고 있다. 특수요원들은 남한의 후방에 침투하여 테러, 습격, 폭파, 교란활동 등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을 은밀히 침투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AN 2기, 글라이더, 대형기구 및 MI계열 헬기, AN 24기 등이 지속적으로 증강 생산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위협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이미 5백여 기의 스커드 미

16) 평원선 이남에 배치된 항공전력은 400여 대로서 총전술기의 48%에 해당된다. 북한의 공군 전투기 전체가 기습공격이 가능하며 이들 대부분이 8~12분내 수도권 공격이 가능한 상태이다.

사일을 보유해 왔으며, 황해도 미사일 기지를 증편하는 등 지난 1994년부터 전방군단 지역에 3개 스커드미사일 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1996년 북한은 한·미동맹관계 이완과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대미 안보접근을 강화함으로써 남한의 군사력 약화를 기도해 왔다. 우선 북한은 미국과의 안보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다.

1997년 북한에서는 김정일 지도력에 대한 문제, 엘리트 및 일반 주민들의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의 충성심 전이 문제 등이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김정일정권의 정통성과 강대성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고 공격력 강화정책을 견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주민들에게 전쟁준비를 독려하고, 대외적 위협에 대한 군사적 투쟁분위기를 고취할 것이다. 김정일은 미사일이나 핵무기와 같은 공격무기 개발위협을 대미접근의 주요 지렛대로 사용하고자 할 것이다. 미사일이나 핵무기는 향후 북한의 대남 군사적 열세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도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식량난을 비롯한 대내문제가 심화될수록 김정일정권은 남한에 대한 직·간접적 군사충돌을 야기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을 조성하려 들 것인 바, 대남기습침투역량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북한은 남한의 군사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는 한·미동맹관계 이완을 목표로 한 대미 안보 접근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대외동향

1. 북·미관계

1996년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합의의 이행을 중심으로 연락사무소 개설, 미군유해 송환, 미사일 개발 및 수출통제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는 등 양국관계를 진일보시켰다. 북·미관계의 진전은 양국간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는 북한의 붕괴를 방지하고, 한반도 안전보장을 구축하려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

제네바합의에 따라 진행되기 시작한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하여, 미국무부 한국담당관인 골드스타인을 단장으로 한 협상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공식적으로 북한측과 협의하였다(9.23). 북한은 아직 연락사무소 개설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미외교행낭과 외교관들의 판문점 통과, 미국의 대북정보수집, 美해병대의 평양 연락사무소 주둔, 워싱턴 연락사무소 개설비용 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미간 베를린 미사일 협상(4.20~21)에서 미국은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 및 핵운반 미사일이나 관련 기술 이전을 금지하기로 한 MTCR을 준수하도록 북한에 요청하였다. 특히 미국은 중동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미사일부품, 미사일 발사대 수출 및 생산

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미군유해송환 협상과 관련하여, 북한과 미국은 2차례에 걸쳐 미군유해송환 협상을 벌였다(1.10~12, 5.4~9). 북한이 과도한 유해발굴비용을 요구하고 유해송환과 평화체제수립 문제를 연계시킴으로써 협상타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미국이 2백만 달러의 유해송환금을 북한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 유해협상에 합의하였다.¹⁷⁾

제네바 합의의 주 안건인 핵동결 작업 및 대북 중유제공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북한은 5MWe 원자로의 재장전을 포기하고, 50MWe, 200MWe 원자로건설을 중단하였으며, 8천여개의 사용후핵연료봉을 밀폐보관하는 작업에 착수해 이 중 절반 이상을 완료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핵동결 작업 진척에 따라, 50만t의 금년분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였다.

이러한 정치·군사적 안전 외 북·미간은 비정치적 접근을 통해 양국간의 관계진전을 모색하여 왔다.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 규제’를 해제함으로써(4.7), 구호용 식량, 보건 및 의약품류, 의류 및 생필품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 물품제공이 정부의 사전 허가없이 유엔이나 국제적십자사 또는 공인된 구호단체·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한편 미국은 유엔인도지원국(UNDHA)이 현지조사(5.14~24) 결과 마련한 ‘유엔 긴급 대북 원조계획’에 따라 620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북·미간 경제관계와 관련, 미국의 1단계 대북 경제제재완화조치

17) 북·미공동발굴팀은 7월 10일부터 한국전 당시 B-29 전투기 추락지점을 중심으로 1차 발굴작업에 들어가 유골 1구를 발견하였다.

(’95.1)에도 불구하고 북·미간 폭넓은 경제교류·협력은 1996년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추가적인 대북 경제제재완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에 대해 아직 명백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미간 경제관계와는 달리 인적 교류는 다소 진전되었다. 미국이 북한을 ‘부랑아국가’(Pariah States) 명단에서 제외시키고(’96.1), ‘여행경고국’(Travel Warnings)에서 제외시킨 조치(’96.2)는 미국인의 북한방문과 양자간 인적 교류의 길을 터 놓은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의 테러 행위가 없었고, 향후 유사한 행동을 유발하지 않겠다는 언질을 북한이 미국에 보낸 점 등이 크게 반영되었다.

인적 교류는 학술교류를 명분으로 추진되었는데, 김정우 대외경제위 부위원장 일행(4.23), 박승덕 주체사상연구소장 일행(4.24), 리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일행(4.29) 등이 세미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였으며, 미정부 관리와도 접촉하였다.¹⁸⁾

북·미간 인적 교류는 양국간 적대 감정을 완화시키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미정부는 북한과의 다양한 접촉을 확대하여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려 하고, 북한은 인적 교류를 진전시켜 관계개선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접근을 통한 양국 관계개선 노력은 ‘잠수함침투 사건’(9.18)으로 차질을 빚게 되었다. 제네바 합의의 주 내용인 핵동결 및 대북 중유제공은 이행되고 있지만, 한국정부가 중심적

18) 이외에도 김문성 대외경제협력 추진위 서기장과 대표단(1.18), 김철남 평화군축연구소 연구원 일행(4.23), 이근 외교부 미주과장 일행(6.23) 등이 미국을 방문하였다.

역할을 맡고 있는 경수로 지원사업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1997년 북한과 미국은 핵동결, 대북중유 제공, 경수로건설사업 등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면서 관계개선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군유해발굴, 미사일 개발 및 수출통제, 생화학무기 감축 등 북·미간 현안에 관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배제된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견지할 것이며, 4자회담의 틀속에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연락사무소개설, 대북식량 지원 및 제2단계 대북경제재완화 조치 등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적 교류 및 대화의 폭을 넓혀 갈 것으로 전망된다.

2. 북·중관계

1996년 북한과 중국간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와 관련 견해차가 노정되었으나, 동북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상호 상대방과의 전략적 유대관계 지속 필요성으로 우호관계가 지속되었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유지 차원에서 북한과 우호관계 유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북한도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대미관계 개선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한국과는 평등·호혜·합작관계를 강화하면서, 대한반도 균형외교정책을 지속할 것을 재확인하였다.¹⁹⁾

탈북자문제가 북·중간 중요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중국은 식량난

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대량 난민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李紀周 중국 공안부부장과 이명운 북한 국경경비총국 부국장은 북경에서 북한인의 불법 월경 문제를 다루기 위해 회담(10.18)을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동 회의에서 불법 월경 북한인들의 범죄 행위가 중국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북한측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중국은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35주년(7.11)을 맞아 군사부문에서 친선발전과 협력증진을 강조하였다. 특히 중국은 王繼英 북해 함대 사령관 지휘하에 여대급 구축함 2척을 북한 남포항에 파견(7.10~12)하여 북한과의 돈독한 군사협력관계를 과시하였다.

이외에도 이상우 인민무력부 대외사업국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군사대표단 일행이 중국을 방문(3.23), 遲浩田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을 통해 양국간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上海 등 지방군구를 시찰하였다. 羅幹 중국 국무원 비서장겸 국무위원을 단장으로 한 중국대표단이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조인 35주년을 맞아 북한을 방문(7.10~13)하였는데, 이는 김일성 사후 중국 각료의 최초 북한 방문이었다.

한반도 평화체제문제와 관련, 중국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현 정전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4.5)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북한의 판문점 비무장지대내 병력투입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대북관계를 고려하여 “정

19) 전국인민대표대회 「공작보고」, 1996.3.5.

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나 안보리가 직접 나서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는 반대(4.11)하였다.

중국은 한국이 비록 정전협정 서명국은 아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관련 당사국이라는 데 반대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정전협정 서명국의 일원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적극적인 역할을 행사하기 위해 4자회담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4.16). 중국은 남북한, 북·미간의 문제해결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선 북·미관계 수립, 후 남북관계 개선」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이 4자회담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錢其琛 중국 외교부장은 최우진 북한외교부 부부장과 한반도 4자회담을 비롯한 양국관계 증진방안을 논의(6.6)하였다.

북한의 금년 상반기 대중국 무역실적은 총 2억 4,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6월까지 북한의 대중무역은 수출 2,700만 달러, 수입 2억 2,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수출은 21.7%, 수입은 7.2%가 각각 감소하였다. 한편 1996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식량은 전년도에 비해 11.2% 증가하였다.

북·중간에는 밀무역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기관원들의 부패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대외경제무역협작부가 국경무역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2.25), 북·중 밀무역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홍성남 북한정무원 경제담당부총리 방중시(5.21~25), 북·중 양국은 비밀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은 동협정에서 북한에게 식량과 석유를 원조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부총리급 인사가 중국을 방문하기는 1995년 1월 김복신 부총리 방중이후 1년 4개월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홍성남의 방중은 북·중관계가 북·미간의 관계진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 경쟁, 북한의 경제위기 및 중국내 정치일정 등을 감안할 때, 1997년에도 북·중간 전략적 유대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7년 김정일 권력승계 시점을 전후하여 북·미간에 연락사무소 개설 가능성이 있는 바,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은 홍콩주권을 회수하고 15차 당대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변국인 북한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최소한도의 경제원조를 계속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1997년 한·중 수교 5주년을 계기로 예상되는 한·중간 정치·안보협력 확대와 15차 당대회시의 중국 지도부 세대교체는 북·중관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3. 북·일관계

1996년 북·일관계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부진했던 한 해였다. 경제관계에서만 예년 수준을 유지했을 뿐 정치적 관계는 북한의 일방적인 對日비난이 거듭된 가운데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양국간에 최대 현안은 수교회담의 재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비단 양국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금년에도 담보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수교회담의 재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 북한의 대일반응은 모두 이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북한은 일본의 하시모토(橋本) 내각이 출범(1.11)하자 지금까지의 '남한일변도'이고 비자주적인 정책에서 벗어난 새로운 대북정책의 수립을 촉구하고,²⁰⁾ 국교정상화 회담 재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실제로 3월 중순 경에는 북경에서 수교회담 재개를 위해 일본과 실무접촉을 가진 바 있고 수교회담 재개 합의서 채택(1995.3.30) 1주년을 맞아 일본 정계 인사들의 북·일수교 관련 발언을 종합 보도하고²¹⁾ 일본 외무성 출입기자단을 초청(5.14~5.21)하는 등 일본과의 수교회담 재개에 강한 희망을 나타내었다.

이밖에도 북한은 대일관계 개선을 위해 사민당 대표단('96.2) 및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96.3)을 초청하는 등 민간차원의 인적 교류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20) 「로동신문」, 1996.2.4; 1996.2.26.

21) 「중앙방송」, 1996.4.2.

1996년 북한의 대일반응은 시기적으로 뚜렷이 대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상반기에는 수교회담의 재개를 위해 매우 조심스런 자세를 취했으나, 하반기에는 일본의 태도를 격렬히 비난하였다.

북한은 이케다(池田) 일본 외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2.9)에 대해 상반기에는 「중앙방송」이나 「평양방송」이 아닌 「민민전」 방송(2.10, 2.13)만을 통해 “영토팽창 야망을 드러낸 범죄적 침략행위”라고 비난했을 뿐 당국의 입장 표명이나 공식 언론매체를 통한 직접적인 논평을 하지 않는 등 대일비난을 자제하였다. 이는 독도 문제를 수교협상 속개의 장애물로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은 4자회담이 제의되고 이케다 외상이 기자회견(5.1)을 통해 “한반도 4자회담이 진행된 후 북·일간 국교정상화 교섭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북한의외교부 이철진 과장이 訪日時(6.24~7.1) 요구한 수교협상의 조속한 재개에 대해 일본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자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북·일간 대화 재개 문제와 관련, 북한은 수교회담 재개와 4자회담을 연계시키고 있는 일본측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국제사회가 4자회담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하시모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쓸데없이 간참하는 주제넘은 소리”라고 비난하였다.²²⁾ 또한 외교부 대변인은 수교회담 재개에 소극적인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과거청산 문제

22) 「중앙방송」, 1996.7.4; 1996.7.7.

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하였다.²³⁾

일본측 태도에 대한 북한의 불만은 독도문제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에서도 반영되었다. 북한은 하반기 들어 지금까지와는 달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비난하였다.²⁴⁾ 또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기도에 대해서도 ‘염치없는 행위’로 비난하면서 “이에 앞서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사죄 및 필요한 보상과 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⁵⁾ 이같은 북한측의 태도는 독도문제의 해결이나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자체를 저지하려는 데 있다기 보다는 그동안 주장해 온 중군위안부 보상을 포함하여 과거청산에 따른 충분한 보상 확보 및 수교회담 조기 실현 등 반대급부를 최대한 얻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996년 상반기 북한의 대일무역은 246.3억엔으로서 전년 동기비 11.6% 증가하였다. 수출은 130.9억엔으로 전년에 비해 3.6%, 수입은 115.4억엔으로 전년 동기비 22.3% 각각 증가하였다. 최근 북한의 對日무역은 규모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역수지에서도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교역규모의 증가는 쌀(일본의 유상지원분), 섬유입가공용 원부자재의 도입 등 對日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다. 이처럼 금년 상반기 대일무역은 수출보다 수입의 증가폭이 커 무역수지 흑자폭이 전년동기의 3,290만 달러에서 1,480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23) 「중앙통신」, 1996.7.26.

24) 「중앙방송」, 1996.8.13; 「평양방송」, 1996.8.17.

25) 「로동신문」, 1996.9.2.

상반기 북한의 대일 주요 수출상품은 위탁가공제품인 의류, 수산물, 볏짚, 광물성 제품 등으로 이들 품목군의 수출규모가 대일 전체 수출액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상품은 방직용 섬유원료, 전기기기, 수송기기, 기계류, 광물성 원료 등으로 이들 품목군의 수입규모 역시 대일 전체 수입액의 68%를 점하고 있어 북한의 대일 교역상품 구조는 일부 품목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향후 북·일 무역규모는 최근의 교역상승세에 비추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나,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대일채무 미해결, 북한의 결재통화 부족 등으로 인해 당분간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투자유치단이 동경(7.15) 등 일본 각지를 순회하면서 나진·선봉지대 투자 설명회 개최 및 9월의 투자포럼 참가단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성과는 미미하였다.

1997년에도 수교회담 재개 여부는 북·일관계의 최대 변수로서 작용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북·일관계는 북·미관계의 진전과 남북 대화의 재개 및 4자회담의 성사와 연계되어 있다. 1997년에도 일본이 한·미·일 공조라는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이 4자회담이나 남북대화를 수용하지 않는 한, 북·일 관계는 1996년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4. 북·러관계

1996년 북·러관계는 전년에 비해 진전되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 복원이 가장 큰 진전이었다. 북한은 러시아와 5년기한의 「투자장려 및 호상보호협정」을 체결(10.28)함으로써 러시아와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게 되었다. 북·러는 수산업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공동위원회 제10차회의에 대한 합의서의 조인(10.12)을 통해 양국간 어획할당량을 비롯 어로, 양어, 양식 등 전반적인 수산업분야에서의 상호협조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간 철도운송협상이 타결(7.23)되어, 북한의 핫산역 사용이 재개되었고 북·러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력위원회 제1차회의 의정서가 조인(4.12)됨으로써 무역·경공업·임업·채취공업·과학기술 등 제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는 국가두마(하원) 지정학문제위원회 주최로 의회청문회를 개최(6.5), 한반도 사태의 예측불가능성을 강조하고 북·러관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북·러간 각방면의 가장 유리한 협조조건을 보장할 법안들을 작성·채택할 양국간 의원연맹을 창설하는 문제 제기와 야쿠츠허-평양-서울간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계획도 토의하였다.

한편 군사적으로는 양국관계가 순조롭지 못하였다. 물론 러시아가 2월에 발생한 러시아무역대표부²⁶⁾ 무장군인 난입사건에 대한 북한측의 무력진압을 묵인함으로써 관계복원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외무차관 파노프는 「북·러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

26) 러시아는 평양주재 무역대표부를 9월 13일 폐쇄하였다.

약」 체결 35주(7.6)를 맞아 작년 8월 러시아가 북·러기본우호에 관한 조약 초안을 북한측에 전달했다면서 이 초안에는 제3국으로부터 침략이 있을 경우 쌍방에 대한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이른바 자동군사개입조항이 배제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러시아 외무부는 「북·러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조약은 폐기되고 현재 대체조약 체결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9.10). 한편 북한은 러시아가 부채상환의 일환으로 BMP-3 장갑차와 T-80U탱크 등의 군사장비를 한국에 제공한 것과 관련 전쟁도발을 부추기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행위라며 러시아를 비난하였다(9.30).

한편 러시아는 4자회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다자회담을 제의하는 한편, 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발표시 한반도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10.16)함으로써 중국처럼 한반도 등거리외교를 표방하였다. 북한은 러시아 하원의장 겐다니 셀레즈네프를 단장으로 한 러시아 국가회의 대표단을 초청(5.26~29)함으로써 양국간 우호증진을 과시하는 한편, 러시아의 야당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보냄으로써 러시아 정국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에서의 공산당독세를 사회주의 우월성으로 선전하려 하였으며, 조선로동당은 옐친대통령에 반대하는 친공산계 극우보수성향의 정치조직인 러시아민족구국전선 대표단과 회담(8.12)을 갖기도 하였다.

1997년 북·러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상호방위조약 문제, 러시아의 KEDO참여 문제를 포함한 경제협력문제, 4자회담문제, 러시아내 벌목공 문제 및 마약밀매문제 등이다. 러시아는 KEDO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고(1.8), 북한이 경제난 타결을 위해 마역밀매업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11.13).

상호방위조약은 러시아의 의도대로 자동군사개입조항이 삭제 내지는 개정된 상태로 수정될 것으로 보이며 대한반도 균형외교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러간 경제협력문제는 러시아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정책으로 인해 보다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IV. 대남동향

1996년 북한은 김정일 정권의 안정과 경제난 해소를 위해 당국·비당국 분리의 대남 강경태도와 통일전선전술을 지속하였고, 정·경 분리의 적대·유화적 태도를 병행하였다. 또한 북한은 공산화 통일기반 조성차원에서 通美封南의 남한배제적 대미접근정책과 더불어 대남 선전·선동 및 무력침투작전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간 대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4자회담’을 요지로 하는 제주선언(4.16)을 발표하였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은 8.15경축사를 통해 ①북한의 안정 ②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③ 합의통일 추진이라는 평화통일 3원칙과 ①남북당사자원칙 ② 유관

국의 협조 ③ 기존 남북합의사항 존중이라는 평화체제구축 3원칙을 북한에게 제의하였다. 북한은 김일성 조문파동 이래 지속해온 남북대화 불용 입장을 재천명하는 동시에 4자회담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공식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미국측에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대미 평화협정 우선 체결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 체제생존전략 차원에서 전개해온 「주 대미협상, 종 남북대화」의 전략구도를 지속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북한은 남북대결을 촉진시키고 남조선혁명을 유도하기 위해 대남공작과 비방을 강화하는 등 통일전선전술을 지속하였다. 예컨대 베를린에 있던 「범민련」 국제본부를 심양으로 이동시키고, 전년에 개최하지 않았던 「8·15 범민족대회」를 금년 평양에서 다시 개최하고 「한총련」(한국대학 총학생회연합)대표를 초청하였다. 그리고 남한정부에 대해 「사대매국정권」, 「파쇼정권」 운운하면서 대남비방을 강화하고, 한총련 등 반체제세력에게 반체제 투쟁을 선동하였다.

셋째, 북한은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남북경제교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반면, 당국간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였다. 북한은 「나진·선봉 국제투자포럼」(9.13~15)에 참가를 신청한 남한측 신청자 53명중²⁷⁾ 25명만을 선별초청함으로써 우리측의 불참을 유도하였다. 또한 북한은 금년에도 수해를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

27) 신청자는 기업인 24명, 기업관련인 5명, 공사관련자 1명, 정부관계자 12명, 언론인 11명 등이다.

였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 당국에 대해서는 일체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종교단체의 원조에 대해서만 은밀히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같은 북한의 선별초청과 수용은 정부와 민간을 분리하고 당국간 접촉을 회피하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넷째, 북한은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고 대미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일련의 고의적인 대남도발과 선동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① 북·미 「잠정협정」 체결 ② 판문점 북·미 「군사공동기구」 설치 ③ 북·미 「장성급접촉」 등을 제의하였다(2.22). 또한 북한은 판문점과 군사분계선상에서 무력시위와 당·정간부들의 발언을 통한 「전쟁위기관」 확산 등을 통해 대남 도발을 지속하였다.

러시아 주재대사 손성필(4.2)과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4.4)은 “조선반도 전쟁발발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인 김광진(4.9)과 노동당 비서 최태복(4.14)은 전투동원태세 견지를 천명함으로써 한반도에 전쟁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또한 북한 경비정 2척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연평도 서남 9마일 해상까지 남하(4.19)하였고, 북한군 7명(장교 1, 사병6)이 중부전선의 군사분계선을 침범(5.17)하였다.

결국 1996년 북한의 대남정책 기조는 남한을 대미관계 개선으로 인해 상실된 ‘주적’으로 상정하는 한편,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는 ‘동포’로 활용하는 ‘적대적 공존’ 지향적 이중전략으로 규정될 수 있다. 즉 북한은 남한위협론을 통해 김정일 정권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남한과의 적대적 공존을 통해 경제난의 타결을 모색하며 나아가 ‘통일전선’사업을 지속함으로써 향후 공산화통일을 위한 기반

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1997년 북한은 대남관계에 있어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북한은 기본적으로 당국간 대화에는 부정적 태도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으로서는 김정일 정권의 안정적 출범과 장기 지속을 위해 부담이 큰 대남관계보다 대외관계 및 대내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역량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일성 생존시에는 그의 강력한 정치지도력과 카리스마를 배경으로 '선 남북관계 개선, 후 대미·일관계 개선'의 전략구도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은 카리스마와 정치지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부 강경세력을 활용하여 선 대미 관계개선, 후 남북관계개선의 전략구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1997년 말 남한에서는 대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김영삼 정부와 대화하기 보다는 김정일의 공식 취임과 남한의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남북대화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대남 경제문제와 관련, 북한은 당국간 대화거부와는 달리 민간 경제교류·협력에 대해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경제교류 협력을 추구하는 북한의 의도는 기본적으로 경제난 타결과 더불어 난항을 겪고 있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경수로지원의 원만한 이행과 연락사무소의 조기개설 등 대미 관계개선을 고려하여 비당국간 남북대화에 최소한 형식적 또는 전술적 차원에서라도 호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비당국간 대화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은 통일전선전술을 더

속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1997년 대선과 남한 경제의 불경기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여 남한사회를 교란시키고, 남북한간 '적대적 공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통일전선전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자주적인 민주정권 세우기 투쟁'을 적극 선전·선동함으로써 남한사회의 내부분열과 통일역량 약화를 유도하고자 할 것이다.

넷째, 대남 군사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은 정전협정 파기선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남 긴장고조 전략을 당분간 지속하는 한편, '평화옹호운동'을 해외에 선전함으로써 이를 정당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이같은 전략의 추진을 통해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미국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북·미 양국간의 관계개선 속도와 폭을 주도하려 할 것이다.

V. 결 론

본고는 1996년 북한정세를 북한의 대내정세, 대외동향 및 대남동향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1997년 북한정세를 전망하였다. 1996년 북한은 생존전략차원에서 김정일 권력기반의 공고화와 경제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으며, 대외·대남 관계도 이에 맞추어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부족 등 총체적 경제난을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비록 농민시

장을 허용하고 분조도급제를 개선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으나, 이는 사적소유 허용이나 시장가격제 도입 등과 같은 근본적 개혁조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따라서 암시장 등 비공식부문 경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북한이 근본적인 체제개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북한경제의 정상화는 비관적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사회적 안정을 위해 북한은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작업도 한층 강화하였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생존전략차원에서 通美封南 정책을 근간으로 대중·대러관계를 유지·강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남북관계는 잠수함침투사건으로 하반기에 더욱 경색되었다.

1997년 북한정세를 전망해 보면 김일성 사망 3주기 이후 1997년 하반기 김정일은 당총비서에 공식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절차상으로는 7차당대회를 개최하여 당총비서 취임과 함께 '4차 7개년 계획'선언을 비롯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북한은 경제난 해소를 위한 대내적 노력과 함께 대미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 개선에 치중할 것이다. 특히 식량난 해결을 위해 분조도급제를 개선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국가납부량 감소와 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외원조와 러시아·중국 등지에서의 '농지임차경작'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은 대내결속을 위해 대남적대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실리적 측면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남북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은 계속 확대하려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남한의 대선

정국을 겨냥하여 대남 평화공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으나, 북한의 남한배제전략은 북·미관계가 일정수준에 달할 때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빈 면

제2주제 토론: 북한의 대내외 동향과 남북관계
전망, '96~'97

사 회: 전현준(북한연구실 실장)
발 표: 최진욱(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토 론: 정대규(통일원 회담사무국)
도준호(조선일보)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전현준: 감사합니다. 방대한 양을 짧은 시간에 발표했기 때문에 토론자께서는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보고서에 빠진 부분이나 중요한 전망에 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대규 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정대규: 북한정세를 대내, 대외, 대남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체계적이고 간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북한정세에 관해 사실 그대로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욕심을 부려 한 두 마디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권력승계문제입니다. 김정일의 공식행사 참석은 12월 1일 현재 44회로 되어 있습니다. 18일 현재까지는 총 47회이고 그 가운데 군관련 행사가 33회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울러 “이같은 활

발한 활동은 김일성 추모 분위기를 승계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김일성 추모 분위기와 승계 분위기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에서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유형화시켜 서술하는 표현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용어는 분석적인 입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김정일 이상화를 극대화하고 있는 현상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권력의 실체와 권력을 위한 상징조작하고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대해서도 보고서에서는 단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김일성 사후 주석이 없음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행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대한 비정상적인 징후에 대해서는 거의 간과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객관적인 측면에서 양자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김일성 사후 권력상충부에는 '95년 3월의 당중앙군사위원회 개편을 제외하고는 권력개편이 없었습니다. 이 점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리라 보입니다.

종합하면 보고서에서는 김정일의 권력승계와 관련된 북한의 이상화작업 등의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 이외의 요소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막연한 추정보다는 사실의 근거 제시가 필요하고 이에 입각한 논리가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동향과 관련해서 보면, 보고서는 북한경제 현황 부분에서 금년 곡물 생산량이 350만톤을 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

니다. 곡물생산량 검토에는 상당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수치는 북한의 발표를 토대로 검출한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기상조건, 기후, 지세 등을 감안하여 유사한 남한의 지역을 선정·비교해서 몇 개 기관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분석·협정한 결과입니다. 최근 통일원 차관은 평통자문회의에서 연설한 내용에서 금년 곡물 생산량을 375만톤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표한 350만톤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95년 생산량을 345만톤, 평년 생산량을 약 450만톤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통일원에서는 약 400만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연간 곡물 수요량을 약 500만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통일원에서는 670만톤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추정의 근거가 의문입니다. 아울러 북한이 식량난을 벗어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특히 최근 북한의 분조관리제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범수용소 수용인원 추정의 근거와 자료에 대해서도 주석이 필요하리라 보입니다. 특히 이 점은 하나의 자료를 단순히 인용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자료와 전문가들의 접촉을 근거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군사동향부분에 보면 “전력증강투자비 누계 측면에 있어서 아직까지 북한이 남한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사투자비 누계는 남한이 완전히 앞서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평원선 이남에 배치된 항공전력은 400여 대로서 총전술기의 48%에 해당된다”는 언급에도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군사동향 분석에 있어서 북한으로

부터의 군사적 위협인식을 북한의 미사일, 핵, 재래식 무기 중 어디에 둘 것이냐는 점에 대해서도 초점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현준: 감사합니다. 자세한 토론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준호 국장이십니다.

도준호: 보고서 내용에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결국 현재 우리의 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의 분석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대내정세와 관련해서 보고서는 김정일의 권력승계와 이상화 작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북한의 개방문제에 대한 분석, 예를 들어 분조관리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점들이 정책수립에 더욱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석에서는 북한의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김정일이 '원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총서기나 국가주석 취임에 주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이 발표한 논문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개발과 수력발전소 건설을 할 데 대하여"와 "사회주의경제발전을 혁명적으로 전환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보면, 연설 내용은 사실 정무원보다는 김정일을 향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20여 년 동안 김정일이 무엇을 했느냐는 의미입니다. 이런 '원죄의식' 때문에 김정일은 쉽게 공식취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건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김일성 시대의 북한도 역시 개방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강력히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김정일이 현재 주변여건과 대내여건 때문에 개방을 주저하고 있지만, 기본 추세는 역시 개방으로 향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의미와 관련해서 북한은 개혁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담았으면 합니다.

대외문제에 있어서 저는 보고서에 있는 분석보다는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건 자체가 내년이 금년보다 대외정책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은 대선이 있으며, 이는 정부의 권력약화를 뜻합니다. 미국의 연착륙정책은 내년에도 불변할 것인데 이에 대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북한은 정전체제의 파괴문제 등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일본 역시 내년에는 북한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활발히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우리가 갖고 있는 지렛대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볼 때 대외문제는 더 비관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4자회담을 남북한과 미국의 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해결점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지만, 거꾸로 북한이 회담 자체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4자회담을 하는 대신 미·북이 먼저 회담하고 한국과 중국은 나중에 개최하자고 제의할 때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냐는 점입니다. 정부는 4자회담을 '열린제외'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회담을 제의만 했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유도하여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고서에서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점들이 지적되었으면 합니다. 중·북관계 역시 기본적으로는 변함이 없으며, 이

념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강택민이 경제발전 못지 않게 이념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북·러관계 역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보다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앞으로는 더 긴밀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변적 여건에 대해서도 보고서에서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사정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습니다. 물론 안기부나 통일원에서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겠습니다만 그 역시 임기응변적인 대응수단이지 기본적인 정책적 틀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탈북자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역으로 김정일이 카스트로처럼 100만 명 정도를 북한에서 내보낼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는 검토와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할 것은 4자회담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와 정책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현준: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용승 연구원입니다.

동용승: 전반적으로 전망 자체가 어두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로 경제문제에 국한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량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올 해로 북한의 3년 완충기경제가 끝납니다. 북한이 계획경제라는 점에서 볼 때 북한은 다음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북한이 완충기경제를 지속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분석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7개년계획이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감안한 상태에서 수립되었듯이, 현재 북한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면 과연 외부로부터 지원되는 부분이 무엇일 것인가 하는 분석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점은 북한의 대외개방정책과도 맥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제도의 도입이라는 차원에서 분조 관리제가 개선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 당국은 “제도적인 경제체제 개혁조치를 채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최근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에서 중요하게 지적해 볼 수 있는 점은 북한에서 여자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적 시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농민시장이 확대되면서 거기서 생필품의 70%를 얻을 수 있고, 북한 당국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자체가 ‘시장’의 방식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물품을 자체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은 시장개혁을 도입했을 때 사회 자체에 커다란 동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 자체가 시장에서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수용하고 있다는 측면도 개혁이라는 요소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일본의 중요성은 자본이 일시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내년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매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자본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일본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의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일본 기업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북·일관계 개선에 대한 물밑작업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북·미관계 진전뿐만 아니라 자본을 중심으로 한 북·일관계개선 움직임도 상당히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현준: 고맙습니다. 우선 발표자께서 말씀하시고 필요할 경우 다른 분야의 관련된 본 연구원의 박사께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욱: 토론해 주신 분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권력승계문제는 가장 관심사이면서도 또한 감지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대규 위원께서는 겉으로 들어난 김정일의 승계, 추대분위기, 선전·선동만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권력행사부분을 간과하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본 보고서는 올 해를 되돌아 보고 내년을 전망하는 데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권력승계 역시 기정사실이며 단지 시기만이 문제이다라는 전제에서 본 보고서가 집필되었습니다. 또한 김정일은 '80년대에 이미 권력을 장악했으며 그 이후에는 특별히 그의 권력이 강화된 것도 약화된 것도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김일

성 사망 이후 겉으로 들어난 김정일의 자료나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분석을 한정하다 보니까 이상화나 공식행사 등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고인민회의와 중앙위 전원회의가 '93년과 '94년 이후 열리지 않은 것도 올 해의 일이 아니라 그 이전의 일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점이 올 해나 내년의 전망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김정일 권력승계에 관한 분석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남궁영: 먼저 북한경제 동향을 분석하는데 경제특구 투자유치에 대한 북한 자체의 평가와 같은 면이 언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94년 이후에는 북한경제특구 투자유치에 대한 변화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식량문제 부분입니다. 북한의 식량수요와 생산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논문이 될 만큼 커다란 논쟁의 부분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그에 대한 통계를 가장 신빙성 있게 만들어 내고 있는 기관이 농촌경제연구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통계를 만들기 위해 정대규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북한별씨를 북한의 기후와 가장 근접한 남한의 지역에서 시험재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사회주의체제가 가지고 있는 체제변수를 고려해 보통 30~35% 정도를 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작업을 매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일 것입니다.

통일원은 올 해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작년보다 증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올 해 북한이 수해, 농촌경제 침체로 인한 농약과 비료의 부족, 상당한 미복구 수해농지 지역 등의 상황에 처한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통일원의 발표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올 해의 생산이 작년의 생산보다 10% 정도의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논리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통일원 발표의 문제점은 올 해의 생산량이 어떻게 작년보다 더 증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정대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일원과 산하 연구기관과의 추정 수치가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다른 수치를 제시할 때는 각주를 통해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점입니다.

오승렬: 사실 저는 경제관련 수치를 제시할 때마다 항상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통일원에서 제시한 자료를 인용할 것인가 혹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해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에서 확실히 제시하는 자료가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시험재배하는 부분도 사실은 오차를 가지고 있고, 그 신뢰도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서로 다른 수치를 제시한다면 심지어는 어느 것 하나 믿을 수 없다고 모두 매도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원과 그밖의 관련 연구자 및 실무자 사이의 많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북한의 분조도급제를 북한의 체제개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물론 북한의 분조도급제가 종전의 12명 정도의 단위에서 7~8명 정도로 작아졌고, 과거에는 분조에서 생산할 일정 지침 이상의 양을 현금이나 특별 보너스 형태로 주었던데 비해 지금은 농민시장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이 '80년대 초반에 채택했던 가족 단위의 자기 사유화로 가는 과도기에 보였던 형태의 분조도급제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7~8명의 구성원 대부분 이질적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 북한의 소조생산제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 개선책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북한 전역에서 채택되고 있는 체제개혁의 시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암시장의 경우도 북한 당국이 부족현상을 메우기 위해 묵인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두 가지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를 사회일탈 현상의 시작이고 붕괴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시각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것이 시장지향적인 개혁의 전조라는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저는 두 가지 모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암시장은 북한 당국이 묵인하여 부족현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체제적인 면에서 보면 이는 시장기구의 효율적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기구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북한의 암시장은 아직 그러한 기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유는 공

식부분이 여전히 가격개혁이나 체제개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세를 분석할 때는 개인의 선호에 의해서 북
한 체제변화를 평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결국 북한의 체제개혁
은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가격구조개혁
이나 소유권 다양화라든가 최소한의 조치들을 가시화할 때 비로
소 체제개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현준: 오늘 발표와 토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
로 북한경제분야의 발표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 관계 현황과 전망

손 기 응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남북한 관계 현황과 전망

손기웅(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 목 차 >

- I. 머릿말
- II. 남북대화
- III. 경수로사업
- IV. 교류·협력분야
- V. 인도주의적 사안
- VI.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 관계
- VII. 1997년도 남북한 관계 전망

I. 머릿말

1996년에도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고수와 한국배제 및 대미관계 개선 우선전략으로 인해 남북간 공식대화는 재개되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대북경수로 지원사업, 남북교역 및 시범적 경험,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지원 등 양 정부간 직접 대화가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서의 남북한 관계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그러나 동해안 잠수함사건으로 인해 남북한 관계는 전면적으로 동결되었으며, 그 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가 제안한 4자회담의 성사여부를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금년의 남북한 관계를 남북당국간대화,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인도주의적 사안, 경수로사업을 포함한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 관계 등의 분야로 나누어 각각 그 현황을 살펴본 다음, 1997년도 남북한 관계의 전망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II. 남북대화

남한을 배제한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추구하려는 북한의 전략은 금년에도 지속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은 무력도발 행위를 감행함으로써 남북한 관계를 극도로 경색시켰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북한은 한국의 휴전협정 당사자자격을 부정한 채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제안해 왔다. 그 일환으로 북한은 1994년 4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는 남북불가침선언, 북·미평화협정체결, 남북군비축소, 주한미군철수, 유엔사해체 등을 총괄하는 개념이라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의 입장은 남한과 「남북기본합의서」(1992년

2월 19일 발효)를 통해 남북불가침선언을 채택했으므로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한반도평화보장체계가 완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북·미평화협정 체결이 단시일내에 실현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북·미평화협정에 이르는 중간조치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북·미장성급접촉을 제안하는가 하면, 북·미군사회담과 남북군사회담의 병행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하였다.¹⁾ 북한의 중간조치는 1996년 2월 22일 북·미간에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협의하기 위해 「북·미공동군사기구」를 설치하자는 제안으로 구체화되었다.²⁾

한편 북한은 금년에도 「기본합의서」의 조문과 정신을 위반하면서 1953년 7월 27일에 서명된 「군사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³⁾ 북한은 1996년 4월 4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명의로 「비무장지대 유지·관리와 관련한 임무포기

1) 1995년 9월 북한은 셀리그 해리슨 미 카네기재단 연구원에게 북·미간 「상호안보협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간에는 군사공동위원회를 운영할 수도 있음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1995.9.28.

2) 북한 외교부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방송」, 1996.2.22.

3) 「남북기본합의서」는 그 전문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합의한다고 밝히고, 제5조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통일원, 「통일백서 1994」(서울: 통일원, 1994), p. 295.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94년 4월 군사정전위원회의 북한측 대표를 철수시키고 그 대신 동년 5월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하였으며, 12월에는 중국측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를 철수시켰다. 아울러 1993년 4월 체코의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의 판문점 철수에 이어 1995년 1월 폴란드의 대표도 철수시킴으로써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

담화」를 발표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진입하는 복측 차량 및 인원에 대한 식별표지부착을 중지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이어 4월 5일부터 8일까지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무장군인을 투입하고 진지를 구축하는 등의 무력도발 행위를 감행하여 긴장을 고조시켰다.

남북한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미는 4월 16일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同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대표간 '4자회담'을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조속하게 개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8개항의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4자회담 제의 한-미 공동발표문」을 발표한 것이다. 同 발표문의 주요 내용은 ① 항구적인 평화협정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이 유지되어야 하며, ② 새로운 항구적 평화체제를 추구하는 것은 남북한이 주도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간의 별도 협상은 고려될 수 없고, ③ 4자회담에서는 광범위한 긴장완화 조치도 토의될 수 있다는 것 등이다.⁴⁾

새로운 평화체제의 핵심은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평화의 구축이며, 특히 군사적 대결구조의 완화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4자회담의 목적도 평화협정을 이룩하기 위한 과정의 개시에 두고 점진적, 단계적 접근을 도모하자는 데 있다. 이렇게 볼 때 4자회담의 단계별 대상의제는 ① 정전체제 준수 및 평화체제 기반조성에 관한 제 문제, ②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제 문제,

4)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남북대화 제64호('95.12~'96.10)」, (서울: 통일원, 1996), pp. 5~6.

③ 평화체제 전환이후의 국제적 보장 제도화에 관한 세 문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⁵⁾

4자회담이 발표된 이후 북한은 이에 대한 공식적 대답을 유보한 채 5월 7일 4자회담의 목적과 현실성에 관하여 미국측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으며, 이를 위해 좀 더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⁶⁾ 이에 대응하여 한·미·일은 제주도에서 고위정책협의 회를 개최하고 남북한과 미국이 공동 참여하는 설명회 형식의 3자접촉, 이른바 “3자공동설명회”를 5월 13일 북한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5월 24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4자회담의 취지와 목적을 명백히 파악하기 위해 미

5) 이를 위한 구체적 이행조치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의제는 ① 남북한 평화의지의 확인 및 관련조치 ② 정전협정준수 및 관련기구 가동 ③ 평화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④ 기본합의서 관련 협의 기구 가동 및 이행 ⑤ 한반도 비핵화공동 선언 관련 협의기구 가동 및 이행 ⑥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등 군비통제 이행문제 ⑦ 각 당사자의 임무 및 위반시 제재 사항 내용 등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방안 연구,” 「민주평통시사자료 (14)」(1996) 참조.

6) 북한은 4자회담 제의가 있는지 이들이 지난 4월 18일 첫 공식 반응을 보였다. 북한 외교부 대변인 「조선중앙통신」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한반도 평화보장문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미국측이 왜 갑자기 4자회담 제안을 내놓았는지 그 취지와 목적이 명백치 않으며, 4자회담 당사자들 사이에 진정한 평화협정을 맺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미국측의 제안에 다른 기도가 깔려 있는지 않은지, 그리고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 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5월 7일 북한은 역시 같은 형식으로 “미국이 내놓은 제안의 취지, 목적, 모종의 기도, 현실성 등을 따져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그에 대한 공식 설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측으로부터 설명이 있기를 좀 더 기다려야겠다면서 두번째 공식입장을 밝혔다.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남북대화 제64호」, pp. 15~17 참조.

국에 설명을 요청했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남조선 통치배들이 공동설명이요 뭐요하면서 나서는 것은 상식이하의 행동”이라며 한국배제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3자공동설명회 제안을 거부하였다.⁷⁾

한편 한국정부는 북한이 4자회담에 호응해 온다면 북한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협력할 것임을 수차례에 걸쳐 언급하였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은 제51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4자회담에서는 평화체제 구축문제, 군사적 신뢰문제와 함께 남북 경제협력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제협력에 관하여 북한의 식량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용의가 있으며, 나진·선봉지역의 투자와 남북교역을 확대하여 북한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한국관광객의 북한 방문을 허용할 용의가 있음도 밝혔다.⁸⁾

1996년 말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4자회담에 대하여 확실한 의사표명을 유보한 채 다만 ‘검토 중’, ‘미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면서 계속 가부의 결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그만큼 4자회담이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북한이 남한의 입장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입장 등 국제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교부, 군부 및 당간에 입장조정이 용이하지 않은 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⁹⁾

7) 「로동신문」, 1996.5.24.

8) 「동아일보」, 1996.8.15.

9) 북한외교부는 4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의도파악과 반대급부를 타진하기 위해서 뉴욕의 북·미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한편 북한군부는 5월 17일 무장병력을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투시키고, 5월 23일과 6월 14일에는 북한 경

이러한 상황하에서 9월 17일 북한이 잠수함을 이용하여 26명의 무장간첩을 침투시키는 군사도발을 감행한 것은 탈냉전기에 냉전이 온존하는 한반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잠수함사건으로 인해 남북당국간 대화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던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남북경협이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4년 10월 21일 서명된 북·미 제네바합의의 이행구도와 남북한 관계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되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의사를 표명했으며, 제7차 경수로 부지조사단의 파견을 유보하였다. 대한적십자사는 대북지원활동을 중단하였다. 한국정부는 또한 10월 21일 “북한은 무장공비침투사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시인·사과하고 유사한 도발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¹⁰⁾ 이에 따라 납득할 만한 조치의 구체적 형식과 내용이 남북한 관계의 진전과 제네바합의의 이행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9월 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무장공비사살에 “백배 천배” 보복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하였으며, 10월 15일에는 경수로사업의 중단을 빌미로 사용후 연료봉 봉인 작업의 중단을 시사하였다.¹¹⁾ 또한 11월 19일에는 잠정적으로 판

비정을 서해 한국의 영해로 침범하게 하였으며, 6월 28일에는 판문점 경비원이 새로운 기장을 착용하게 하는 등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를 통해 이러한 행위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이견이 대두될 것을 기대하는 동시에 대미직접 협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10) 「중앙일보」, 1996.10.22.

11) 북한은 외교부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잠수함사건을 연계하여 경수로사업이

문점연락사무소 대표들을 철수시키고 그 업무를 중단할 것을 발표했다. 나아가 11월 14, 19, 26일에 각각 개최된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급회의에서는 잠수함이 훈련중 표류했음을 주장하면서 승무원 유해송환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미 정상은 11월 24일 마닐라에서 개최된 APEC 회의기간을 이용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발표문(Joint Press Release)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한·미정상은 제네바합의의 이행과 4자회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이 잠수함사건에 대해 “수용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미는 경수로사업 및 4자회담의 추진과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약속의 촉구를 병행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한·미간에 북한의 사과방식 및 사과수준, 대북지원 및 대북경제제재 완화의 속도, 북·미관계와 남북한 관계의 조화 등의 사안에 대한 상호 입장간의 조율이 향후 과제로 남게 되었다.¹²⁾

잠수함사건 이후 남북한 관계와 제네바합의의 이행이 재조정되게 되었다. 특히 남북한, 미국의 3각관계 속에서 남북한간 협상채널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네바합의의 구도를 유지하고 북·미관계를 진전시키면서 동시에 남북한 관계를 어떻게, 어떤 수준에서 진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계속 지연되면 제네바합의 이행을 중지하고 사용후 핵연료 봉인작업의 중단을 포함하여 핵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조선중앙방송」, 1996.10.15.

- 12) 한국정부는 잠수함사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의 ‘주체’와 ‘대상’을 분명히 하는 바탕위에, 북한이 잠수함침투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한 뒤 ‘재발방지약속’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에는 군사·안보문제 뿐만 아니라,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경제협력, 경수로사업, 인도주의적 문제 등 다차원적인 이슈들이 얽혀 있다. 따라서 각 이슈들의 우선순위와 상호연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요구한 사과 및 재발방지약속 요구를 북한이 어느 정도로 수용하느냐 하는 것이 국면전환의 고리가 될 것이다.¹³⁾

이러한 상황하에서 1997년의 남북한 관계를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반기에는 잠수함사건의 해결여부가, 하반기에는 김정일 권력승계 및 북·미관계 전개 등이 남북한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제네바합의의 이행과 4자회담 추진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한도 대미관계 진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잠수함사건은 북한이 한국의 요구인 “납득할 만한 조치”의 상당부분을 수용하되 한·미가 부분적으로 양보하는 바탕위에 북한이 4자회담에 대한 3자공동설명회 참가를 약속하는 한편,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및 식량지원,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경수로사업 재개 등이 보장되는 포괄적 이행구도의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게 진전될 경우 남북한 관계도 일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실제 북한은 12월 9일부터 뉴욕에서 진행중인 미국과의 협상에서 대북 식량지원, 대북 경제제재 완화, 중유제공보장, 경수로사업

13) 박종철, “김정일정권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 117.

이행, 미군유해 송환, 북·미연락사무소 개설,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등 전반에 관하여 미국측의 양보를 전제로 하고 한국측에 잠수함사건에 대한 사과를 표명한다는 일괄타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과방식과 수준이 한국정부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음에 따라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북한은 사과의 주체 및 대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4자회담 개최를 전제로 한 3자공동설명회 개최에도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포괄적 이행구도에 의해 3자공동설명회가 개최되더라도 남북당국간의 직접 대화로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이 ① 대내결속을 위해 남북한간 긴장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②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대미접근을 한층 강화시킬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③ 체제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직접협상하려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전략을 계속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자회담에 대해서도 북한은 모호한 입장을 계속적으로 견지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가 경색국면을 벗어나 한국의 대북 지원과 남북경협이 금년보다는 비교적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폭적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루어지기도 어려울 것이다.¹⁴⁾

14) 한편 대선을 치루게 되는 남한의 정치일정을 이용하여 북한이 다음과 같은 대남전략을 구사하여 남한내 정치적 갈등을 조성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다른 한편으로 북한주민 김정호 일가 17명이 북한을 탈출한 사례(12월 9일 입국)가 암시하듯 1997년에 북한이탈주민이 대규모,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남북한 관계가 다시 경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Ⅲ. 경수로사업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동결과 사용후 연료봉의 봉인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1995년 12월 15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에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되었다. 공급협정은 경수로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틀로서 공급범위, 상환조건, 인도 일정, 이행구조 등 전문 18개조와 4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13개 후속의정서의 체결을 규정하고 있다.¹⁵⁾

수 없다. 첫째,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여 공식적인 취임식을 가질 경우 남한의 정치인 혹은 정치세력을 선별 초청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권력승계 이후 대대적인 평화공세를 펼치면서 그 일환으로 특정 정치인과의 회담을 제안할 가능성 등이다.

- 15) 즉 ① 상환금액 및 조건(제2조 4항) ② 인도 및 이행일정, 일정조정(제3조 3항) ③ KEDO의 법적 지위, 특권 및 면제(제4조 6항) ④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의 영사보호 조치(제4조 7항) ⑤ 부지접근과 부지사용(제5조 3항) ⑥ 품질보증서 내용, 발급 및 수령절차(제6조 4항) ⑦ 훈련계획(제7조 1항) ⑧ 사용후 연료 북한밖 이전(제8조 4항) ⑨ 사업현장으로의 출입을 위한 통행로(제9조 3항) ⑩ 통신 및 기타 서비스(제9조 6항) ⑪ 안전점검 절차 및 일정(제10조 5항) ⑫ 핵사고시 배상협정, 보험 및 기타 재정적 보 장장치(제11조 2항) ⑬ 의무불이행시 벌칙금 산정 및 부과(제16조 3항) 등

이에 따라 금년에는 경수로사업이 다음과 같이 추진되었다. 첫째, 주계약자 선정과 관련하여 KEDO는 3월 19일 집행이사회 결의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일괄도급방식으로 경수로사업을 수행할 주계약자로 공식 선정하였고, KEDO와 한전은 3월 20일 한전을 북한에 대한 경수로공급사업의 주계약자로 지정하는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이에 앞서 한전은 경수로건설을 위한 사업전용역(Pre-Project Services)을 수행하기 위해 KEDO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형측량, 시공계획수립, 건설비산정 등의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전은 7월 15일 경수로사업의 개략사업비를 산정하여 KEDO에 제출하였다. 개략사업비는 건설비용 49억 2천만 달러와 부대비용 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아직 공식사업비는 확정되지 않았다. 주계약자로 지정된 한전은 1997년 중 KEDO-한전간의 주계약(상업계약)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KEDO는 1996년 7월 미국의 듀크사(Duke Engineering and Services)를 기술자문사(Technical Support Consultant)로 선정하였다.

둘째, 경수로건설 예정부지인 함경남도 신포지역¹⁶⁾에 대한 제3, 4, 5, 6차 부지조사가 한국측 기술진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제1차(1995.8.15~8.22) 및 제2차(1995.10.24~11.4) 부지조사가 KEDO

에서 KEDO와 북한이 후속의정서를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원, 「남북교류협력법규집」(서울: 통일원, 1996), pp. 207~242 참조.

16) KEDO는 신포시 금호리 해변에서 1.5km 떨어진 지역 100여만평을 경수로 건설부지로 내정한 상태이다. 「동아일보」, 1996.2.28.

주관하에 한·미·일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실시되었다면, 3차 부지조사(1995.12.16~1996.1.16) 이후부터는 한전이 사업전용역의 일환으로 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측 전문가가 부지조사를 주도하였다.

특히 1월 16일에서 2월 24일까지의 제4차 조사를 위해 대형시추 장비, 물리탐사장비, 시추드릴 등 지질조사용 장비와 부품이 1월 14일 부산항을 출발하여 나진항으로 운송되었다.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된 제5차 조사에서는 북한이 건설지역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평양-신포간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등 상당한 준비중임이 확인되었다. 7월 6일부터 30일까지의 제6차 조사에서는 북한의 기존자료를 재가공하고, 현장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작성계획도 수립하였다.¹⁷⁾

셋째, 후속의정서와 관련하여 KEDO와 북한은 7월 11일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KEDO의 법적 지위와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¹⁸⁾ 「KEDO와 북한간의 통신의정서」,¹⁹⁾ 「KEDO와 북한간의 통행의정서」²⁰⁾ 등 3개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KEDO의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에 따르면 KEDO는 북한 내에서 법인격을 가지며 계약체결, 동산·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소송제기, 북한당국과의 협상 등의 권한을 가진다. 면책대상지역

17) 경수로 부지조사 현황에 관하여는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남북대화 제64호」, pp. 72~76 참조.

18) 통일원, 「남북교류협력법규집」, pp. 243~265 참조.

19) 위의 책, pp. 266~288 참조.

20) 위의 책, pp. 289~299 참조.

은 경수로사업부지,²¹⁾ 관련지역²²⁾ 및 연계지역²³⁾으로 구성된다. KEDO와 KEDO 자산은 모든 형태의 법적, 행정적 절차로부터 면제되고, KEDO인원에게는 외교관 특권을, 주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에게는 준외교관 특권을 부여하며 직원가족의 동반거주가 허용된다. KEDO가 부지내 질서유지를 책임지며 북한은 KEDO의 질서유지에 간섭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은 KEDO계약자 인원²⁴⁾이 북한 관습을 따르도록 요구하지 못하며 이들에게 정치·사회적 의무도 부과할 수 없다.

「통신의정서」에 따르면 KEDO인원,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북한의 국내·국제 우편서비스, 전화, 팩스 등 북한내 통신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보안이 유지되는 독자적 통신수단을 설치·사용할 수 있으며 부지준비 기공식으로부터 24개월 후 독자적 위성 통신수단을 설치하고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통행의정서」는 공로와 해로를 명시하고 있다. 항공수송은 북경과 함흥 인근의 선덕공항을 이용하며 기초굴착공사 시작전까지 추가 항공로를 지정해야 한다. 해상수송의 경우, 바지선은 남

21) 건설부지, 주거 및 후생복지시설지역, 「부지인수·부지접근 및 사용에 관한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기타 부지를 포함한다(제2조 a).

22) 인력 및 물자를 사업부지로 수송하는 데 관련된 지역, 이를 위해 선정된 항구 및 공항, 이러한 장소와 경수로 사업 부지간 왕래 통행로를 포함한다(제2조 b).

23) 경수로사업과 관련된 회의나 기타 행사를 위하여 임시 또는 특별한 계기로 선정된 장소나 구역 및 비상사태나 기타 사유로 도달된 장소를 포함한다(제2조 c).

24) KEDO 계약자와 하청계약자가 파견한 모든 인원, KEDO의 관할하에 북한에 체류하는 기타 인원 및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제17조).

북한 직항로를 이용하며 KEDO인원과 물자는 공해상 진입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KEDO인원,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의정서에 규정된 통행로와 출입지점을 임의로 선택하며, 이 경우 무비자가 적용된다.

공급협정 체결 이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던 경수로사업은 북한 잠수함사건으로 인해 잠정적으로 중단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KEDO와 북한은 부지인수와 북한이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에 관한 의정서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9월 28일 북한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월 80~130 달러 수준에 하기로 합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잠수함사건으로 인한 남북한 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한-미가 이에 대한 서명을 유보하였다. 또한 1996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던 제7차 부지조사단의 방북이 취소되었으며, 11월에 경수로사업을 착공하겠다던 계획도 무산되었다. 잠수함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요구하는 한국과 이를 전부 수용하지 않으려는 북한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경수로사업은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수로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잠수함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한국정부에 의해 수용되고 남북한 관계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 핵활동의 동결이 유지되고 사용후 연료봉 봉인작업이 재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북한의 성실한 자세와 함께 KEDO-북한간에는 후속의정서 조인 및 협상이 진행되고, 제7차 부지조사단의 방북으로 부지선정을 위한 마무리 조사가 실시되어 1997년에는 부지정리공사가 착공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수로사업의 본격화를 위해 KEDO-한전간에는 주계약 체결 협상이 진행될 것이며, 경수로사업의 비용분담, 경수로사업의 사업참여 등을 둘러싸고 한·미·일간의 협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고, 재원분담 등 세부사항에 관한 KEDO내 합의가 전제된다면 경수로 사업은 향후 큰 걸림돌이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경수로사업이 재개될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부지준비공사와 관련하여 부지인수 및 유료서비스에 관한 의정서가 서명되면 이미 합의된 세 개의 의정서와 함께 부지준비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법적 기초가 마련된다. 따라서 경수로사업의 재개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부지준비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아울러 최종부지선정을 위한 마무리 부지조사도 실시될 것이다.

둘째, KEDO와 북한간에 후속의정서에 관한 협상이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1단계에서 품질보장 및 의무불이행시 조치에 관한 두 개의 의정서가, 제2단계에서는 훈련계획 및 인도일정에 관한 두 개의 의정서가, 그리고 제3단계에서는 경수로가격 상환조건, 안전점검, 핵사고시 보상, 사용후 연료 처리에 관한 네 개의 의정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셋째, 경수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계약자인 한전과 KEDO간에 상업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넷째, 재원분담에 관한 협의가 한·미·일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KEDO가 한전이 제출한 개략사업비를 바탕으로 사업비용을 결정할 경우 한·미·일은 이를 토대로 비용분담 협상을 개시할 것이다. 각국은 분담규모가 확정된 후에 재원조달방안을 결정할 것

으로 보인다.

다섯째, 합의된 후속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관련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다.²⁵⁾

IV. 교류·협력분야

1. 경제분야 교류·협력

1996년도 남북간 경제분야 교류·협력은 다른 분야에 비해 남북한 접촉이 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침체되었다.²⁶⁾ 이는 부분적으로 남북한 관계의 냉각에 기인하지만, 북한의 경제침체에 따른 상품수출능력의 저하가 그 근본 원인이다.

금년 11월 말까지 남북교역은 승인기준으로 반입 865건 1억 6,303만 달러, 반출 665건 5,978만 달러로, 합계 1,530건 2억 2,281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러한 교역규모는 전년 동기의 1,242건 2억 9,104만 달러에 비해 23.4% 감소한 수준이다(<표 1> 참조).²⁷⁾

25) 전성훈,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74~95 참조.

26) 10월 31일 현재 북한주민접촉현황을 살펴보면 690건의 신청에 대해 647건이 승인되었다. 이 중 실제로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는 405건이며, 이를 분야별로 보면 경제분야 269건(66%), 이산가족분야 79건(20%), 학술·문화·종교 등 사회·문화분야 57건(14%) 등으로 경제분야에서의 접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 통일원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65호(1996), pp. 13~37 참조.

<표 1> 남북교역 승인현황(1988.10~1996.11)

(단위: 건, 개, 천 달러)

구분	반 입			반 출			합 계		
	건수	품목 수	금액	건수	품목 수	금액	건수	품목 수	금액
'88	4	4	1,037	-	-	-	4	4	1,037
'89	57	20	22,235	1	1	69	58	21	22,304
'90	75	26	20,354	4	4	4,731	79	30	25,085
'91	328	92	165,996	40	48	26,176	368	140	192,172
'92	365	93	200,685	42	34	12,818	407	127	213,503
'93	478	87	188,528	76	39	10,262	554	126	198,790
'94	601	92	203,521	173	50	25,423	774	142	228,944
'95	755	120	236,075	604	86	73,751	1,359	206	309,826
소계	2,663	213	1,038,431	940	158	153,230	3,603	371	1,191,661
'96	865 (694)	119	163,033 (222,335)	665 (548)	68	59,780 (68,705)	1,530 (1,242)	195	222,813 (291,040)
합계	3,528		1,201,464	1,605		213,010	5,133		1,414,474

주 : '96년은 1~11월 누계, ()는 '95년 동기실적

<표 2> 남북교역 통관현황(1988.10~1996.10)

(단위: 건, 개, 천 달러)

연도	반입			반출			합계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89	66	24	18,655	1	1	69	67	25	18,724
'90	78	21	12,278	4	3	1,187	82	24	13,465
'91	300	50	105,722	23	17	5,547	323	67	111,269
'92	510	81	162,863	63	24	10,563	573	105	173,426
'93	601	77	178,166	97	21	8,425	698	98	186,591
'94	708	83	176,298	267	42	18,248	975	125	194,546
'95	976	99	222,855	1,668	90	64,435	2,644	189	287,290
'96	1,206 (805)	115 (92)	154,111 (196,214)	1,672 (1,377)	90 (75)	62,564 (53,925)	2,878 (2,182)	205 (167)	216,675 (250,139)
합계	4,445		1,030,948	3,795		171,038	8,240		1,201,986

주 : '96년은 1~10월 누계, ()는 '95년 동기실적

한편 남북교역을 통관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총규모는 1996년 10월 말 현재 2,878건 2억 1,667만 달러이며, 이는 전년 동기 2,182건 2억 5,013만 달러에 비해 약 15.4% 감소한 수준이다. 물자교류의 규모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대외경제관계에서 남북교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약 15%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반출 및 반입이 남북교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통관기준으로 10월 말 현재 각각 28.9%, 71.1%로서 교역에서 반출/입의 불균

형은 계속되고 있으나, 위탁가공교역의 증대로 전년에 비해 불균형의 폭은 감소되고 있다. 주요 반입품목은 철강금속류 및 섬유류이며, 반출에서는 위탁가공교역의 활성화에 따라 섬유류 원/부자재가 주요 품목을 이루었고 화학제품도 상당량을 차지하였다. 금년도 남북간 물자교류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북한산 마그네사이트가 처음으로 국내에 반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남북교역을 형태별로 보면 9월 말까지의 교역실적으로 볼 때, 간접교역이 92.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직교역은 7.9% 수준에 머물렀다.²⁸⁾ 한편 위탁가공교역의 규모는 승인기준으로 11월 말까지 5,462만 달러이며, 이는 전년 동기 4,414만 달러에 비해 23.7% 증가한 수준이다. 위탁가공교역의 주요 품목은 의류, 칼라 TV 등이며, 참여한 기업은 총 34개사에 달하였다.

1994년 11월 8일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가 제정된 후 경제교류 및 협력사업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한국 기업은 10월 말까지 34개사 208명이며, 시범적 경협사업을 위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은 경수로사업과 관련한 한전을 제외하고 (주)대우를 포함한 10개사이다.²⁹⁾ (주)대우는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와 남포공단 내에 민족산업총회사(합영)를 설립하여 셔츠, 블라우스, 재킷, 가방 등을 생산하고 있다.³⁰⁾

28)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남북대화 제64호」, p. 104.

29) 나머지 9개사는 고탐물산(주), 한일합섬(주), 국제상사(주), (주)녹십자, 동양시멘트(주), 동릉해운(주), 삼성전자(주), (주)태창, 대우전자(주) 등이다.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현황에 관하여는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남북대화 제64호」, p. 111 참조.

30) 「한국일보」, 1996.4.29.

남북경협은 이를 계기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북한이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나진-선봉지대 「국제투자포럼」에 우리 기업 및 관계자들을 초청할 것으로 알려져 남북 경제관계에서 새로운 전기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³¹⁾ 그러나 북한은 우리측 참가신청자를 선별 초청함으로써 우리측의 불참을 유도하였고, 그 결과 남북한 경제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는 마련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도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어 발생한 잠수함사건은 남북한 관계를 전반적으로 경색시켰고 경제교류·협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997년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금년의 침체국면을 벗어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상품수출능력의 저하와 경화부족으로 인해 남북교역량이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투자부담없이 외화획득이 가능하고, 낙후된 경공업분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탁가공교역을 선호하고 있어 위탁가공의 규모와 범위는 증가될 것이다.

한편 위탁가공교역을 제외한 물자교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민간기업의 직접투자에 기초한 남북한 시범적 경협사업 및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진출은 앞으로 남북 경제관계의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된다.

31) 「국제투자포럼」의 배경과 영향에 관하여는 박순성,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참조.

2.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1996년 남북한 사회·문화분야 교류는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즉 1995년 63건 620명에서, 1996년 11월 말 현재 57건 491명으로 줄어들었다. 부문별로는 학술 23건 179명, 종교 9건 130명, 문화 3건 40명, 체육 6건 12명, 관광·교통 2건 6명, 기타 14건 124명 등의 교류가 성사되었다.

학술분야의 교류는 다음과 같다. 1월의 「제6차 동북아 경제포럼」(1.18~19, 하와이), 4월의 「제5차 코리아 평화통일 심포지엄」(4.19~20, 버클리) 및 「북한경제관련 세미나」(4.22~23, 워싱턴)에서 남북한간 접촉이 이루어졌다. 5월에 열린 「저어새 보전 국제워크숍」(5.6~7, 북경)에는 북한 국가과학원 자연보호센터 박우일 소장이 참석하여 북한 저어새 번식실태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6월에는 「동북아시아 평화와 경제협력학술회의」(6.1, 장춘)가 열려 한국 평화문제연구소와 북한 주체과학원 관계자들 간에, 그리고 「국제 핵전예방 의사연맹 북아시아 4개국회의」(6.3~4, 북경)에서 각각 남북한 접촉이 있었다. 8월에는 학술분야의 접촉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다. 「21세기 동북아 학술토론회」(8.1~4, 심양), 「'96 조국통일에 관한 국제학술토론회」(8.5~6, 런던), 「한국어 언어학자 학술토론회」(8.5~6, 장춘), 「제3회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8.12~14, 연길), 「코리아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학술회의」(8.19~21, 북경), 「연변대학 성인교육 학술토론회」(8.22~23, 연길) 등 6개 학술회의에 남북한이 참가하였다. 9월에는 「통일을 위한 남북한 및 해외학자 학술회의」(9.13~15)가 북경에서 열려 남한(21

명), 북한(9명), 해외(5명)에서 관련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통일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종교분야의 교류를 보면 1월에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한 국제기독교 에큐메니칼협의회」(1.29~2.2, 마카오)에서 남북한 접촉이 이루어졌고, 2월에는 「남북종교인회의」(2.26~28, 니이가타)에서 국내 10개종단 협의기구인 한국종교협의회와 북한종교인협의회 관계자들이 남북종교교류 문제를 논의하였다. 6월에는 「제5차 기독교 동경회의」(6.6~7, 동경)에서 남북한 및 해외 기독교계 인사간의 접촉이 이루어져 해외교회의 연대와 평화통일운동이 논의되었다.

1996년 체육분야에서의 첫 접촉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51차 국제군인체육대회 정기총회」(4.13~25)였다. 이어 애틀란타 하계올림픽, 「제19회 윌리엄 존스배 국제농구대회」(8.14~26, 대만) 및 「제5회 동아시아 호프스 탁구대회」(8.26~28, 고베) 등에서 남북간 경기가 있었다. 그외에 「세계관광기구 동아태지역위원회」(3.25~27, 오오사카)와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5.21~24, 오마치)에서 소규모 남북간 접촉이 있었다.

이상과 같이 제3국에서의 접촉·교류는 남북당국 접촉·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현실에서 남북한간에 유효한 교류통로가 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남북한 사회·문화분야 교류는 북한체제의 전반적인 정책기조를 고려할 때 현저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잠수함사건으로 경색된 남북한 관계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를 당분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잠수함사건이 해결되면 제3국에서 개최되는 학술회의, 종교행사, 혹은 체

육대회에서 남북한 교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자간 직접 교류·협력의 초기 동력을 얻기 위해, 그리고 일단 시작된 당국자간 대화의 지속성을 위해 민간단체(NGO)간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가능한 한 적극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V. 인도주의적 사안

인도주의적 사안으로는 이산가족문제, 납북자문제, 북한인권문제 등이 있다. 이산가족문제는 정치색을 배제하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1996년에도 남북한간의 제도화된 공식통로를 통한 이산가족상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남북 이산가족간의 접촉은 남측 이산가족의 개별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 설치된 9개의 이산가족연락센터를 통해 개인적 접촉을 모색하거나, 중국·미국·일본·캐나다 등의 이산가족상봉 주선단체를 통해 상봉이나 서신교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산가족들의 대북주민접촉을 1996년 10월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72가족이 재북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였으며, 북한가족이 보낸 서신 386통이 접수되었고, 14가족은 제3국에서 북한가족과 상봉도 하였다.³²⁾

32)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남북대화 제64호」, pp. 86~87.

1955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에 의한 납북자중 미송환자는 44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996년 납북자문제와 관련한 주요 현안은 지난해에 납북되었던 안승운 목사와 한국전 당시 국군포로의 북한 생존 가능성 등이었다. 안목사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인 리경춘이 9월 중국법원으로부터 납치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한국정부는 안목사의 즉각 송환 및 관계자 처벌, 불법 납치 사실에 대한 공식사과를 북한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안목사가 자진 입북했다는 주장을 펴면서 송환을 거부했다.

국방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국전을 거치면서 북한지역에 억류 또는 실종된 국군의 수는 1만 9천여명에 달한다. 한국은 수차례에 걸쳐 군사정전위를 통해 국군포로의 송환 및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국군포로 중 생존자들은 아직 억류중에 있거나 요주의 인물로 분류돼 일정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최하층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1996년 한국정부는 처음으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북송교포문제 등 분야별 인권침해 실태를 담은 「북한인권백서 1996」을 발간하였다. 한국정부는 또한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는 바, 同 법률안은 12월 17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³³⁾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사

33) 同 법률안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탈출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회적용 지원과 정착지원시설 건립 등이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1995년의 1, 2차 대북 수재지원에 이어 1996년에는 모두 7차례(3~9차)에 걸쳐 북한수재민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³⁴⁾ 또한 한국은 북한을 돕기 위한 국제사회의 호소에 동참하기 위해 7월 1일 200만 달러를 세계식량계획(WFP)에 현금으로 송금하였으며, 8월 30일에는 100만 달러 상당의 전지분유를 인천항을 통해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UN아동기금 대표에 전달하였다.

북한은 자체의 인권문제를 희석시키고 국제적인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남한내 출소 공산주의자 문제를 계속 제기하여 왔다. 8월 말 북한적십자사 명의로 출소 공산주의자 김인서의 송환을 거론한 데 이어 9월에는 이른바 “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 조선위원회”라는 단체명의로 김인서를 치료하기 위해 두 딸을 남한에 파견하겠다고면서 공세적 입장을 취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북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연맹에, 조선인권연구협의회는 유엔인권위원회에 각각 김인서 송환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1997년 남북한 관계가 경색국면을 벗어날 경우에도 북한은 이산가족상봉, 안목사문제, 남북자 생사확인문제 등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협력하기 보다는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사안에서 제도화된 진전을

규정하고 있다.

34)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남북대화 제64호」, pp. 119~132 참조.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국제인권단체들과의 협조하에 북한내 인권실태에 대한 자료조사와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남측 이산가족의 개별 노력을 통한 접촉 및 상봉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주민 김정호 일가의 탈출을 계기로 북한이 전반적인 사회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남측 이산가족의 노력이 성사될 가능성은 금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VI.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 관계

1996년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관계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관련 회의, 제네바군축회의, 유엔 등에서 전개되었다. TRADP와 관련하여 북한 선봉에서 3월 27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실무그룹회의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1차(4월 18일~19일) 및 제2차(10월 21일~23일) 협의위원회 회의에서 남북한 대표들간의 접촉이 있었다. 실무그룹회의에서는 중국, 러시아, 몽골, UNDP 등의 관계자와 함께 남북한 대표들이 통신 및 인프라분야에 대한 상호관심사를 논의하였다. 제1차 협의위원회 회의에서는 TRADP를 위한 사무국소재지 선정, 운영경비 조달방안, 사무국장 선임, 협의위원회 의사규칙, 중기사업계획 등에 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제2차 협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사규칙과 일본의 협의위원회 가

입 권유안이 채택되었으며, 북한 등 접경 3개국의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³⁵⁾

한편 남북한은 6월 17일 다자간 군축협상기구인 제네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 CD)에 동시 가입하였다. 이로써 남북한은 제도적 차원에서 국제군비통제 흐름에 동참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한반도 군비통제를 위한 협력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였다.³⁶⁾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선으로 태국에서 9월 10일부터 13일 사이에 이루어진 남북한, 일본, 중국 등 4개국 항공실무자 대표 회의는 남북한 협력을 위한 또 다른 기회가 되었다. 同 회의에서 모든 참가국의 민간항공기에 대한 자국영공 개방원칙이 합의되었으며, 항공관제협상을 위한 제2차 후속회의를 11월 27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잠수함사건으로 인한 남북한 관계 경색으로 한국은 同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잠수함사건의 후유증은 남북한

35)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남북대화 제64호」, pp. 112~113 참조.

36) 제네바 CD는 1978년 7월 제1차 UN 군축특별총회 결의에 따라 1979년 1월 설립된 세계유일의 다자군축협상기구로서 최초 군축위원회(Committee on Disarmament)로 설립되었으나, 1984년 2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로 개칭되었다.

미국과 러시아 등 5대 핵보유국을 포함하여 38개국이 참가하였던 CD는 금년에 남북한, 이라크, 남아공화국 등 총 23개국(Group 23)의 신규가입문제를 토의하고 이들이 동 회의의 합의사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가입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남북한의 동시가입이 실현된 CD는 총 61개국이 참여하여 국제 군비통제 문제를 논의하고 협상하는 명실상부한 다자군축협상 무대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으며, 국제 군비통제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손기웅, “한반도 안보증진을 위한 국제군비통제활동 활용방안”,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1996년도 군비통제세미나」(서울: 국방부, 1996), p. 110.

이 참여하는 또 다른 국제회의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12월 초 TRADP의 일환으로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해운산업의 전자자료교환(EDI)에 관한 실무회의」가 1997년으로 연기된 것이다.

유엔에서의 남북한 관계는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로 인해 대립 국면을 보였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무장군인을 비무장지대에 투입한 사건에 대해 유엔안보리 의장의 대언론 구두성명이 4월 11일 발표되었으며, 잠수함침투사건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및 정전협정 준수를 강조하는 내용의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10월 15일 채택되었다.³⁷⁾ 또한 10월 29일 유엔총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져 북한만이 유일하게 반대한 가운데 찬성 142표, 기권 8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

1997년에도 남북한은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차원의 접촉을 하게 될 것이다. 잠수함사건이 해결되면 남북한은 금년의 대립상태로부터 벗어나 경수로사업, TRADP,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게 될 것이다. 다만 4자회담에 북한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37) UN안보리 의장성명은 안보리에서 정전협정 준수를 최초로 언급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침입과 이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지는 않았다. 同 성명은 잠수함의 ‘침입’(infiltration 또는 incursion)이라는 표현 대신 ‘사건’(incident)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잠수함이 기관고장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다. 또한 정전협정 준수를 원론적으로 강조했을 뿐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대남침입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북한 당사자들이 대화에 의해 평화적으로 현안을 해결하도록 권장했을 뿐 북한의 책임규명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호응해 오는가에 따라 남북한간 접촉수준과 협력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VII. 1997년도 남북한 관계 전망

1997년의 남북한 관계는 상반기에는 잠수함사건의 해결여부가, 하반기에는 김정일 권력승계 및 북·미관계 전개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잠수함사건은 북한이 우리측 요구를 상당부분을 수용하고 한·미가 부분적으로 양보하는 바탕위에 3자공동설명회 개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및 식량지원,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경수로사업 재개 등이 보장되는 포괄적 이행구도의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남북한 관계는 일단 국면전환을 맞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견지하면서 남한당국과의 대화재개를 가급적 회피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또한 4자회담에 대해서 계속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가 경색국면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남한측의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이 대폭적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수로사업은 잠수함사건 해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수로사업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KEDO와 한전간의

상업계약 체결과 비용분담 및 사업참여 범위 등에 대한 한·미·일 간의 협의가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금년의 침체국면을 벗어나 위탁가공교역의 규모와 범위가 증대될 것이며, 시범적 경협사업 및 민간기업의 대북투자를 위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다만 그 수준 및 범위는 정전협정과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편 제3국에서 개최되는 학술회의, 종교행사, 체육대회 등을 통한 남북한 교류는 금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997년에도 인도주의적 사안은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여전히 진전을 이루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국을 통한 남측 이산가족의 북한주민 접촉 및 상봉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를 대비하는 정부의 노력은 강화될 것이며,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을 위해 종교계 등 민간 단체에 의한 지원 사업도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경수로사업,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 관계는 지난해의 경색과 대립국면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한편 남북한 관계에서는 당국자간 직접 대화는 여전히 본격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민간부문에서의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은 좀 더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빈 면

제3주제 토론: 남북한 관계 현황과 전망

사 회: 김영윤(정책연구실 실장)

발 표: 손기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토 론: 양영식(통일원 회담사무국)

정규섭(관동대)

김영윤: 이 시간은 남북한 관계에 대한 전망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토론을 하실 때는 남북한 관계 전망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럼 먼저 양영식 위원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양영식: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논문을 읽고 제가 느낀 점은, 연례적으로 다음 해를 전망하는 보고서는 대외비 보고서와 공개 발표용 보고서를 각각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논문이 금년도의 남북한 관계를 분야별로 총체적으로 잘 분석했다고 봅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논문이 내년을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볼 때, 보다 큰 차원에서 정세를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남북한 관계는 북한이 사건을 일으키고 남한이

이에 대응 수습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문가들과 정책담당자들이 군사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한 문제에서 군사문제를 제외하면 남북한 문제를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비무장지대 및 정전협정과 관련된 문제를 남한 정부가 주도한 경우가 한번도 없습니다. 군사문제와 정치문제는 복합적으로 봐야 정책적인 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기 분야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를 없애야 합니다. 금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에도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비무장지대의 작전통제권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금기 분야를 없애야 솟아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남북한 관계에서 정치·군사·외교 문제를 복합적으로 다루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이홍구 현 신한국당 대표는 부총리 시절, “남북한간에는 상호 의사소통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채널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에서는 미국을 통해서만 남북관계가 이루어지는 형편입니다. 정책을 논하는 전문가 수준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언급되고 주도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이 바로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카드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북한이 일으킨 문제에 대해 북한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남한이 북한에 대해 어떤 채널을 통해 직접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래야만 북한이 똑같은 카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되고 남한이 직접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밀채널을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서 정책 전망을 작성해야 할 것입

니다.

둘째, 프라이오리티(priority) 문제입니다.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매년 많은 보고서가 출간되는데, 그 중 권위있는 내용을 담은 몇 편이 나와서 주목을 끌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것에 대한 언급을 하면, 먼저 “상호 부분적인 양보를 통해 잠수함침투사건으로 인한 경색국면을 극복하고”라고 서술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부분적인 양보’라는 표현에는 협상에 대한 이해가 깊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남한 정부는 흔히 북한에 대해 강도있게 요구했다가 미국의 입장을 쫓아 용두사미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협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호 부분적인 양보’는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시를 해주는 것이 좋겠고, 좀더 상세하게 전개했으면 좋을 듯합니다.

남한의 대선일정을 이용한 북한의 대남전략의 가능성에 대해서 각주에서 언급했는데,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정치세력들 중에서 선별초청하여 남북제정당 및 사회단체협상 형식의 통일전선전술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인데, 분명 북한은 남한의 대선정국을 이용할 것이므로 오히려 본문에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도 분단 이후 매너리즘에 매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제3국에서 만나는 것은 승인하고 재야 및 대학생들이 만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 왔습니다. 사회·문화분야는 상대적으로 경시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 특히 제3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의 중요성을 인식

하여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내년에도 국제학술회의가 빈번할 것을 예상되는데, 이런 자리는 북한 엘리트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자리이므로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학술회의를 통하여 북한 엘리트들을 안으로부터 설득해가면 음으로 양으로 북한 정책에 반영될 것입니다.

인도주의적 문제도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한 정부가 인도주의적 문제에 관해 북한에 모든 책임을 미뤘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즉, 이산가족들이 스스로 상봉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산가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는 뒷집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이산가족문제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북자 문제와 이산가족문제를 별도로 깊게 다루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산가족문제를 가족 당사자들이 해결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해외동포단체, 종교단체 등을 통해서라도 적극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도 이 논문에 언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미군유해 문제를 북한과 논의하는데, 왜 남한은 15,000명이나 되는 6·25 전사자 및 전사자 유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런 정치적 이슈들도 약간이라도 이 논문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수로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현재 남한은 경수로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수로 문제와 관련하여 남한의 내년도 대책방향을 논의했으면 더욱 논문이 충실해질 것으로 봅니다.

남북한은 다자간 군축협상기구인 제네바 군축회의에 동시 가입

하여 군사문제를 가지고 해외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남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실이 국민들에게 홍보되어 있는 않은 데, 이는 남한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군사문제를 등한시하는 입장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본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군사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합의서'의 불가침 관련 내용이 함께 논의되어야 연례정세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북한에 개설되면 교차승인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도 언급하면 좋겠습니다.

김영윤: 감사합니다. 보다 넓게 정세를 보고 문제제기를 해주셨고 논문의 세부적 내용도 지적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섭 교수님의 논평을 듣겠습니다.

정규섭: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자회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4자회담이 향후 남북관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자회담이 제기된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그 내용을 부각시키고 어떤 위치, 어떤 수준에서 그것을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 밝혀줘야 합니다.

마닐라 한·미정상회담에 관해서도 한·미관계의 문제를 부각시켜서 정리하고 북한이 대남 군사적 긴장을 유발한 이유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런 것들이 4자회담의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도입 부분을 북경의 쌀회담과 연계시켜 전개하고 8·15 대통령 경축사 내용도 추가하면 좋을 듯하고, 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즉 사건의 시작과 종결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잠수함사건 이후 북한이 비서장회의를 개최하여 남한에 보복선언을 했는데, 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 4자회담 → 8·15 대통령 경축사 → 잠수함침투사건 → 남북관계 경색 → 마닐라 한미회담 등의 일련 과정에 대한 요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북대화 관련하여 좀더 내용을 보충하고 남북한 관계 전망을 다각도로 예측하면 좋은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남북한 특사회담 문제는 보고서에서 제외시켜도 무방할 듯 하며, “남북한과 미국이 잠정적으로 북·미회담과 남북관계에 대한 포괄적 구도에 대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라고 서술했는데 이 점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한 내용에 대해 발표자인 손기웅 박사께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손기웅: 남한의 입장은 북한이 잠수함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약속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추체와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양보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2+4가 아니고 1+4에 의해서 사실상 이루어졌습니다. 통일과정에서 동독은 유명무실한 존재였습니다. 즉, 미국의 절대적인 지원하에 서독의 지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아,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한-미관계는 절대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배울 수 있는 사실은 단순히 독일과 미국이 공조하는 가운데 독일이 추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독일은 항상 최소한도의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지켰습니다. 냉전에서 데탕트로 가는 가운데 독일은 진정한 냉전의 해결이 베를린 문제의 해결에 있다고 판단했으며, 신냉전기에 있어서는 유럽연합 내에서의 정치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요구했습니다. 한-미관계에서도 남한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전시에 유엔사령관으로 이관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한-미간에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한 장성들이 전시 작전권을 남한이 갖는 것에 회의를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남한의 대선일정을 이용한 북한의 대남전략의 가능성에 대해서 각주에서 언급한 것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NGO는 당국간의 대화 초기 동력을 제공하고 대화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계속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할 예정입니다.

군축문제에 대해서는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북한에 국제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북한이 군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기이전등록제도가 ARF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북한

은 여기에의 가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할 경우 무기이전등록제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영윤: 잘 들었습니다. 손기웅 박사님의 대답에 대해 토론자들께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전시 작전통제권을 언급한 이유는 그 자체를 위해 논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잠수함사건과 관련하여, 남한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서 미국과 접촉하지 않고 대국민 감정만을 가지고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남한 정부의 대응방식은 감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창의적이고 냉정한 차원에서 미국과 접촉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 하나의 방안으로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언급한 것입니다.

정규섭: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김영윤: 지정 토론자가 아니신 분들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 전시 작전통제권을 남한에 이관하는 것은 한-미간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남한이 그 권한을 갖고 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발표시기만 남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해서도 연합사와 합참의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북한 관계 전망에 대한 토론을 이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주제발표 및 토론에 임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빈 면

< 회의 일정 >

10:00~10:05

원장 개회사

10:05~12:00

제1주제: 통일환경

- 사회: 여인곤(국제연구실 실장)
- 발표: 김국신(국제연구실 책임연구원)
“동북아 안보정세와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 토론: 김유남(단국대)
김창수(KIDA)
백진현(외교안보연구원)

12:00~14:00

오찬

14:00~15:30

제2주제: 북한정세

- 사회: 전현준(북한연구실 실장)
- 발표: 최진욱(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북한의 대내외 동향과 남북관계
전망, '96~'97”
- 토론: 정대규(통일원 회담사무국)
도준호(조선일보)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15:30~15:45

Coffee Break

15:45~17:15

제3주제: 남북한 관계

- 사회: 김영운(정책연구실 실장)
- 발표: 손기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남북한 관계 현황과 전망”
- 토론: 양영식(통일원 회담사무국)
정규섭(관동대)

빈 면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政勢 展望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問題
-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연구보고서>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改善方案: 정상회담
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
·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
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
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
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십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과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
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의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 96-06 북한의 대 주변4국 군사관계
-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향 연구
- 96-10 통일과정에서의 민간단체의 역할
-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 96-16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협력 이론을 중심으로-
-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 96-18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96-19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관계
-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통일정세분석>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
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對外 개방 現況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中心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和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
-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 96-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 96-05 러시아 大選結果 分析
- 96-06 金日成 死後2年: 北韓政勢의 動向 및 展望
- 96-07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 96-08 일본총선 결과분석
- 96-09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세계주요사건일지>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 96-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 1 ~ 1996. 3. 31)
- 96-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4. 1 ~ 1996. 6. 30)
- 96-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7. 1 ~ 1996. 9. 30)

<연례정세보고서>

- 91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 94-02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4~1995
- 95-01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5~1996

<논 총>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1996)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1994)

<자 료>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I)
-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I)

<통일문화시리즈>

94-01 統一文化研究(上)

94-02 統一文化研究(下)

95-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上)

95-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下)

96-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上)

96-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下)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세미나시리즈 96-05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研究調整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 232-4725, FAX : 238-329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6년 12월 일

發行日 1996년 12월 일
